
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”

2027년 예산안

2026. 9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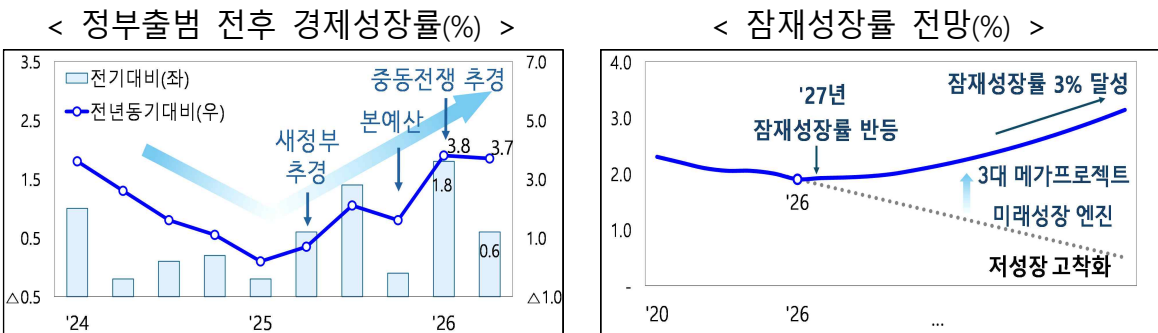
순 서

I. 기본 방향	1
II. 예산안 전체모습	2
III. 재정운용 혁신	5
IV. 중점투자 과제	11
1. 「3대 메가프로젝트 + AI」 총력 지원	
2. 미래 성장엔진 확충	
3.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	
4. K자형 양극화 대응, 모두의 성장	
5.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	
[별첨] 분야별 투자방향	46

I. 기본 방향

1 그간 성과 및 과제

- **적극재정으로의 전면 전환**을 통해 **V자형 경제회복** 견인
 - 경기부진 상황에서 '25.2차 추경(31.8조원) 편성으로 **반등** 기반 마련
 - 확장적 '26년 **본예산(+8.1%)** 편성과 **중동전쟁 추경(26.2조원)** **최단 기간** 처리를 통해 **'26년 상반기 +3.8%** 성장 뒷받침
- 경기회복이 **구조적 성장**과 **양극화 완화**로 이어지도록 **전략적 투자** 필요



2 '27년 예산안의 의미

-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**온전히 예산안 편성의 전 과정**을 주관하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**국정 성과를 본격화**하는 예산
- **적극적 재정**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에 **담대하게 투자**하는 예산
 -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**역대 최대 규모 재정투자**를 통해 **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**과 **성장 과실의 확산**을 뒷받침
- 55년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등 **의무지출 개혁**과 「**적극재정 - 경제 성장 선순환**」 구조의 안착을 통해 **미래 세대에 희망**을 남기는 예산
 - 대규모 세수에도 **고강도 지출구조조정**을 병행하여 **효율적 재정운용** 도모
 - '98년 외환위기 시 투입한 **공적자금 상황**을 **완료**하여('03~'27년, 총 97.2조원) **30년만에 IMF 위기 극복** 완수

Ⅱ. 예산안 전체모습

- ◇ **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지출**에도 불구하고, 최근 20년 내 **관리재정수지**는 가장 양호하여 **경제성장**과 **재정건전성**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

□ **[총수입] 전년 대비 30.4% 증가한 880.8조원 [+205.6조원]**

-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**법인·소득세**의 **큰 폭 증가** 등으로 '26년 대비 **+194.2조원 증가**('26년 본예산 390.2 → '27년안 584.4조원)
-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'26년 대비 **+11.4조원 증가**('26년 본예산 285.0 → '27년안 296.4조원)

□ **[총지출] 전년 대비 12.8% 증가한 820.9조원 [+93.0조원]**

- 잠재성장을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**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**('26년 본예산 727.9 → '27년안 820.9조원)

* 역대 총지출 증가율: ^{1위}('09) 10.6% ^{2위}('19) 9.5% ^{3위}('20) 9.1% ^{4위}('21) 8.9% ^{5위}('22) 8.9%

-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**랜드마크 사업** 등 중점투자

< 2027년 재정운용 모습 >

(단위: 조원, %)

	'26년		'27년 예산안(B)	증감(B-A)	%
	본예산(A)	추경			
◇ 총수입	675.2	700.6	880.8	+205.6	30.4
· 국세수입	390.2	415.4	584.4	+194.2	49.8
· 세외수입	285.0	285.2	296.4	+11.4	4.0
◇ 총지출	727.9	753.0	820.9	+93.0	12.8
· 예산	481.4	504.0	505.0	+23.7	4.9
· 기금	246.5	249.0	315.8	+69.4	28.2

□ [수지 · 채무] 관리재정수지 $\Delta 0.1\%$, 국가채무 48.3%

-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3.8%p 개선된 $\Delta 0.1\%$
- 국가채무(GDP 대비)는 전년대비 3.3%p 감소한 48.3%

(단위: 조원, %)

	'26년		'27년 예산안
	본예산	추경	
◇ 통합재정수지 (GDP 대비)	$\Delta 52.7$ ($\Delta 1.9$)	$\Delta 52.5$ ($\Delta 1.9$)	59.9 (1.9)
◇ 관리재정수지 (GDP 대비)	$\Delta 107.8$ ($\Delta 3.9$)	$\Delta 107.6$ ($\Delta 3.8$)	$\Delta 3.1$ ($\Delta 0.1$)
◇ 국가채무 (GDP 대비)	1,413.8 (51.6)	1,412.8 (50.6)	1,519.8 (48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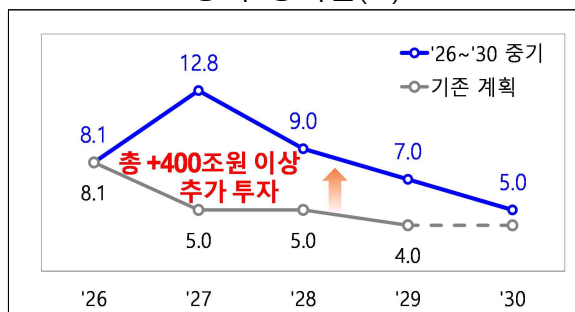
□ [중기계획] '30년 관리재정수지 $\Delta 3.0\%$ 이내로 관리

- (총지출) 기존 계획('25~'29)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하여,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여력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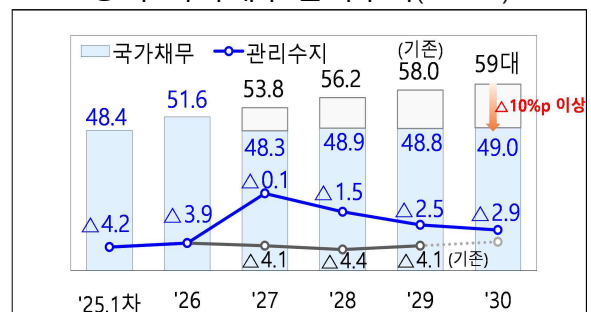
* '25~'29 중기계획 대비 40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규모 확대

- (관리재정수지) GDP 대비 $\Delta 3.0\%$ 이내로 관리
- (국가채무) '30년 GDP 대비 40%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여 '25~'29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%p 이상 개선

< 중기 총지출(%) >



< 중기 국가채무·관리수지(GDP%) >



* 기존계획 상 '30년은 '25~'29 중기계획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

〈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〉

				(조원, %)
구 분	'26년 본예산(A)	'27년 예산안(B)	증감 (B-A)	증감률
◆ 총지출	727.9	820.9	93.0	12.8
1. 보건·복지·고용*	264.4	289.0	24.6	9.3
(구 기준)	(269.1)	(293.9)	(24.8)	(9.2)
2. 교 육	99.9	110.7	10.8	10.8
(교부금 제외)	(28.3)	(31.9)	(3.6)	(12.8)
3. 문화·체육·관광	9.6	11.6	2.0	20.4
4. 환 경	13.9	14.6	0.7	5.2
5. R&D	35.5	39.5	4.0	11.2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31.8	41.2	9.4	29.7
7. SOC	27.7	28.9	1.2	4.0
8. 농림·수산·식품	28.0	30.7	2.7	9.5
9. 국 방*	67.7	73.3	5.6	8.2
(구 기준)	(65.9)	(71.8)	(5.9)	(9.0)
10. 외교·통일	7.0	7.1	0.1	1.1
11. 공공질서·안전	27.3	28.8	1.5	5.3
12. 일반·지방행정	121.4	149.0	27.6	22.8
(교부세 제외)	(52.0)	(71.8)	(19.8)	(38.1)

* 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군인연금기금을 보건·복지·고용분야에서 국방분야로 이관하고, 국방분야 지출액은 일반회계 총계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개편

Ⅲ. 재정운용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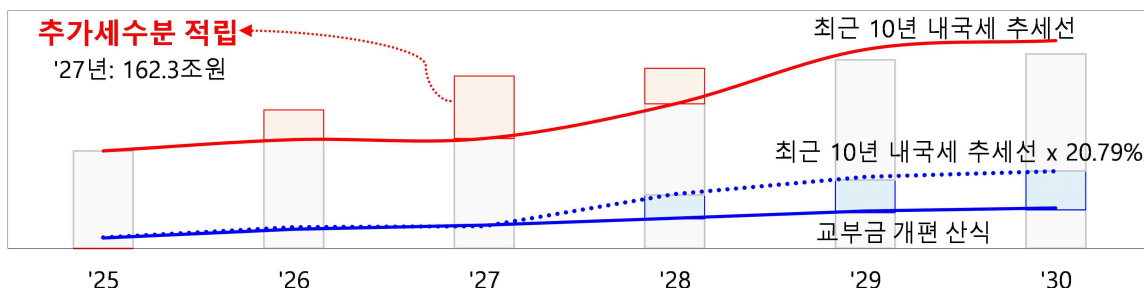
- ◇ 세수 변동성 확대,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등 **근본적 여건 변화**에 대응하여 **미래·지방·공정·성과**의 원칙으로 **재정제도 개편**

1. 미래대응기금 신설

- **[의의]**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**생산적 지출**에 활용하는 **전략적 투자 플랫폼** + 필요시 **재정여력**을 보강하는 **재정안정화 장치**

- **['27년 수입안] 162.3조원**

- 최근 **10년 내국세 추세선**(‘15~’25년 6.2%)을 **상회**하는 **추가세수분** 적립
 - * '27년 추세치 = '25년 결산액 × (1 + 최근 10년(‘15~’25년) 연평균 증가율)²
- **교육교부금 개편***에 따른 **절감액** 중 최근 **10년 내국세 추세선**을 하회하는 절감재원은 교육·인재계정에 **별도 적립**
 - * 전년도 교부금 × (1 +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) × [1 + (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×0.35)]



- **['27년 지출안] 45.4조원**(사업비 기준)

- **청년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** 4대 분야 **NEXT 원칙*** 부합 사업
 - * ^N자본축적(New-Capital), ^E과감한 투자(Enterprising), ^X탄력적 집행(fleXible), ^T시급성(Timely)

- ① **(청년)** 일자리·창업, 주거, 자산, 혼인·출산 등 **성장단계별 종합 지원**
- ② **(성장동력)** 글로벌 AI 3강 도약, 지분투자형 R&D,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
- ③ **(지방)**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, 행정통합 지원, 농촌 정주여건 개선
- ④ **(교육·인재)** 글로벌 초격차 인재 양성 및 희망의 기회사다리 구축

- **['27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] 12.5조원**

- **['27년 여유자금] 약 104.4조원 + α***

- * '26.9월 세입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'26년 증가분 추가 적립
-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**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** 가능

【 미래대응기금 주요사업 】

계	◇ 4대 사업계정: 52.9조원(사업지출 45.4조원, 여유자금 7.5조원) ◇ 총괄계정: 109.4조원(국채신규발행 축소 12.5조원 여유자금 96.9조원) ※ 여유자금 운영 등: 104.4조원(총괄 96.9, 지방 5.0, 교육·인재 2.5조원)
청년 계정 (13.3조원)	① (일자리·창업) 노동부청년첫취업지원(신규0.4조원), 중기부창업사업화(1.0조원) ② (주거안정) 국토부보편형 공공임대주택(신규1.4조원) ③ (자산형성) 금융위청년미래적금(1.7조원), 금융위청년기회자금(신규0.1조원) ④ (혼인·출산) 복지부,성평등부혼인·출산·양육 3종 패키지(2.9→3.8조원) ⑤ (생활·문화) 문체부청년문화예술패스(361억원→0.8조원)
성장동력 계정 (14.2조원)	① (AI) 과기부프론티어급 AI 개발(신규4.7조원) 과기부모두의 AI(신규0.25조원) 산업부제조암묵지 R&D(신규0.3조원), 과기부·산업부AIDC 생태계(신규0.3조원) ② (전략기술) 국토부지울주행실증도시(0.1→0.8조원), 우주청차세대 발사체(0.1→0.3조원) ③ (지분투자) 재경부공급망안정화(0.2조원), 금융위PF사업장 정상화 펀드(신규0.5조원) ④ (전력·용수) 기후부한전출자(신규0.5조원), 기후부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(신규0.1조원)
지방 계정 (15.3조원)	① (일반재원) 행안부지방미래성장지원금(신규3.5조원), 행안부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(신규1.5조원) ② (농어촌) 농식품부농업 AX실증(신규0.02조원), 농·수산물 유통개선(신규0.01조원) ③ (행정통합) 행안부전남·광주 통합지원금(일반2.85조원, 사무이관0.65조원) ④ (기타) 문체부지방 호텔 건립 지원(신규0.15조원) ※ (여유자금) 5조원
교육·인재 계정 (10.1조원)	① (초격차 인재) 과기부4대 과기원(0.7→0.8조원), 과기부이공계 장학금(0.1→0.2조원), 중기부창업중심대학(신규0.1조원), 과기부AI중심대학(0.1→0.2조원) ② (고등·영유아) 교육부미래인재성장자금(신규0.7조원), 교육부교사아동비율 개선(0.3→0.5조원) 교육부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(신규0.2조원), 교육부인턴학기제(신규0.5조원) ※ (여유자금) 2.5조원
총괄 계정 (109.4조원)	○ (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) 12.5조원 ※ (여유자금) 96.9조원 + α* * '26년 세입재추계(26.9월) 이후 변경된 '26년 내국세 수입 증가분

2. 국정성과 창출형 재정체계 신설

- 반도체, 지역 필수의료, 5극3특 초광역권 등 역점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**특별회계·기금 신설**

* 기금 67→69개(폐지 △3개, 신설 +5개), 특별회계 21→22개(폐지 △1개, 신설 +2개)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(2.6조원)	▶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, 전남·광주 통합지원(1.5조원)	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 (2.8조원)	▶ 5극3특 초광역권 지원
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(1.3조원)	▶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, 책임·거점의료기관 지원	전략수출금융기금 (1.4조원)	▶ 대규모·장기 전략 수출 프로젝트 수출금융 지원
자원안보기금 (1.4조원)	▶ 장기적 시계에서 핵심 자원안보 분야 투자	농업발전기금 (6.3조원)	▶ 기존 소규모 기금 통폐합 (농지 + 농안 + FTA)
미래대응기금 (45조원)	▶ 청년세대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 등 4대 분야	공익신고장려기금 (0.3조원)	▶ 17개 부처, 22개 포상금

3. 지방우대 및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

-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서 **지방주도 성장**을 적극 뒷받침

- ① **(지방우대)** 지방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**지방우대원칙 적용*** 사업을 **획기적으로 확대**(7→61개)

* ▲지원금 상향, ▲자부담 인하, ▲사업물량 확대, ▲지원율 인상 등

- ✓(국가장학금) 지방국립대(30개교) **무상교육** 실시 * 의대·치대·약대·수의대 제외
- ✓(K-뉴딜 아카데미) 훈련수당 수도권 30만원, 비수도권 50만원 차등 지급
- ✓(내일배움카드) KDT 특별 훈련수당 비수도권 20~60만원 추가 지급
- ✓(청년도전성장지원) 국비보조율 수도권 80%,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·비수도권 90%

- ② **(자율성 확대)**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**초광역계정 신설**(2.8조원),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**포괄보조 확대**(10.6→11.9조원, 121→150개 사업)
- ③ **(행정통합)**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'27년 재정 인센티브 **5.0조원**(미래대응기금 3.5조원 + 반도체특별회계 1.5조원) 지원

【 지방우대원칙 적용 주요내용 】

- '27년 예산에 지방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하여 6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우대기준 적용
- 대상사업은 전국적 시행 사업으로서 인구유입, 산업 육성, 일자리 확충,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
 - 정부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❶지원금 상향, ❷자부담 인하, ❸사업물량 확대, ❹지원을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 적용

〈'27년 지방우대 주요사업〉

사업명	일반 지원	우대 지원
가정형 태양광 보급	국비 보조율 30%	국비 보조율 40%
청년도전성장지원	국비 보조율 80%	국비 보조율 90%
청년문화 예술패스	10만원/년	15만원/년
K-청년 뉴딜아카데미	훈련비 약 14,500원/시간 훈련수당 30만원/월	훈련비 약 24,500원/시간 훈련수당 50만원/월
4단계 두뇌 한국21	석사 100만원/월 박사 160만원/월 박사수료 130만원/월	석사 115만원/월, 박사 195만원/월, 박사수료 165만원/월
내일배움카드 (K-Digital Training)	특별훈련수당 선도기관: 10만원 AI캠퍼스: 20만원	특별훈련수당 선도기관: 30 ~ 50만원 AI캠퍼스: 50 ~ 80만원
전공의 등 수련수당	100만원/월	120만원/월
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	-	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신설('27년 신입생) 및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개편 (지방사립대 학생 지원)

4.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

- **조세 지출을 재정 전환**하여 소득재분배 및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, 재정 지원의 성과가 **국민에게 환류**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

① **(조세지출-재정전환)** 총 17개 사업, 1.9조원 규모 전환

- ✓ 혼인·출산세액공제(0.3조원) → 혼인·아이맞이지원금 신설(0.9조원), 저소득 신혼부부 포함
- ✓ 대중교통 소득공제(0.3조원), 주이용자 저소득층 제외 → K-패스 환급 확대(0.6→0.9조원)
- ✓ 전기차구매 세제혜택(0.4조원), 전기차 보조금과 중복 → 보조금과 통합(2.3→3.0조원)

② **(이익공유) 지분투자, 지원방식 전환**(출연/보조→출자) 등 성과 환류

- * (지분투자형 R&D) 화합물 반도체,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고난도·고보상 R&D 대상 (프론티어급 AI 모델) GPU 1만장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(4.7조원) → 정부 출자로 이익 공유

③ **(공익신고장려기금)** 주가조작, 담합 등 **반사회적 행위**에 대한 **신고 포상금 재원**(17개 부처, 0.3조원)을 통합 관리·운용하기 위한 기금 신설

5. 강력한 지출구조조정

- **저성과·비효율 사업**은 과감히 감축·폐지하여 핵심 국정과제 재투자

① **(재량지출)** 역대 최대*인 **△38.6조원 절감**하여 15% 감축 목표 달성, 전체 사업의 10% 이상인 **2,100여개 사업 폐지**

- * 지출구조조정 실적(조원): ('22) △12.8, ('23) △24.1, ('24) △22.7, ('25) △23.9, ('26) △26.9

② **(의무지출)**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**△69조원 감축***, 목표(10%) 초과 달성

- * 지방교부세(△30.5조원), 교육교부금(△32.5조원), 구직급여(△1.4조원) 등

- **(교육교부금)**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만에 **개편**, 인재 양성에 재투자
- **(구직급여)** 무급휴일 지급 제외(주 7→6일) 등 제도개편을 통해 취업유인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등 저출생 대응에 재투자

【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용 】

□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→ 핵심사업 재투자

① (재량지출: △38.6조원) ① **소규모·관행적, 불요·불급 경상비** 지원 과감히
 절감, ② **저성과, 다부처 유사·중복 사업비**도 고강도 구조조정

경상비	√ 온라인 홍보 전환, 행사 축소 등 경비 절감(△0.1조원) √ 회의·교육 비대면 전환, 관행적 정책연구·유지보수비 감축(△0.5조원) √ 특정업무경비를 직무에 따라 차등화(△48억원)
사업비	√ 농·어업 정책자금 통폐합, 재생에너지융자 이차보전 전환(△3.8조원) √ 전부처 정보화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유휴 시스템 통폐합 (△517억원) √ R&D 기술트렌드 등 반영(△6.2조원), ODA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(△0.9조원) √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(△0.2조원), 일반 직무훈련 축소(△0.3조원)

② (의무지출: △69조원) 경제·사회 여건 변화 반영하여 **구조개혁**

교부세· 교부금	√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에 대한 교부세·교부금 (교부세 △30.5조원, 교부금 △32.5조원) →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√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* 전년도 교부금 × (1+3년 평균 경상성장률) × [1+(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×0.35)]
실업급여	√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 (무급휴일 제외, 7→6일), 고용서비스 혁신 을 통한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√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자 범위 조정

□ **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, 국민·시민사회 제안**(국민참여플랫폼),
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**지출효율화 TF** 등 적극 활용

IV. 중점투자 과제

목표	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	
기본 방향	-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 성장 과실의 세대·지역·계층 확산을 통한 K자형 양극화 완화	
투자 중점	① 3대 메가프로젝트 + AI 총력 지원 (10.8→21.3조원, +97.2%) - K-반도체 강국, 초격차 지속 -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- AIDC 산업생태계 조성 - 전력·용수·산단 인프라 전폭 지원 - 프론티어급 AI모델 구축, 모두의 AI	② 미래 성장엔진 확충 (51.2→62.8조원, +22.7%) - 포스트 반도체, 첨단전략산업 육성 - 에너지 대전환 -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- 높은 문화의 힘, 문화강국 도약 - 중소기업 성장·도약·수출 지원
	③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(28.2→43.3조원, +53.5%) (교육) 첨단인재 양성, AI 역량 강화 (일자리) 일경험·훈련 등 72만개 지원 (자산)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(주거) 청년 선호 주택 10.6만호 공급 (혼인·출산·양육) 복지급여 통합·확대 (생활·문화)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	④ K자형 양극화 대응, 모두의 성장 (85.7→117.1조원, +36.6%) -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- 소상공인·농어민·취약노동자 민생안정 -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-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
	⑤ 국민 안전·평화(30.7→38.3조원, +24.8%) -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자주국방 실현 - 국민 최우선의 실용 외교 -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-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립	

【주요 랜드마크 15대 과제】

과제명	주요내용	(조원)	
		'26	'27
프론티어급 AI, 모두의 AI	- AI모델 고도화를 위해 최고 성능 GPU 1만장 구매 - 국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제공	-	5.0
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	(전력) 한전 출자, 전선로 지중화, ESS 설치 (용수) 수공 출자 등 (산단) 장기임대용지 공급 등	-	2.1
미래 모빌리티	자율주행 실증차 지원(200→3,000대), UAM 실기체 도입(3대)	0.1	0.9
2030 달 착륙	'30년 달 착륙을 위한 착륙·발사체 R&D 지원	0.2	0.6
에너지 대전환	공장지붕·영농형 태양광 설치, 햇빛소득마을 확산	4.2	6.6
K-컬처 문화강국	신진·유망 예술인 대상 지역 예술활성화 사업 신설, 메가관광권 조성, 패노메논 연계 K-컬처 확산 지원 등	2.8	3.7
청년미래적금	소득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 * (기존) 저소득 청년 → (변경) 모든 청년, 지방중소재직자 우대	0.7	1.7
청년선호 보편형 임대주택	역세권 등 우수 입지, 넓은 평수(50~84m²) 2만호 공급 (기존유형 대비 단가 최대 2배 이상 지원)	-	3.8
혼인·출산·양육 3종 패키지	조세지출·복지급여를 통합·확대하여 3종 패키지 지원 * 혼인지원금, 아이맞이(출산)지원금, 아동기본수당 지원	5.3	6.1
청년문화예술패스	모든 청년에게 매년 제공하도록 대상·기간 확대 * (기존) 19~20세, 생애 1회 → (변경) 19~34세, 매년 10/15만원	0.04	0.8
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	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(1~3천억원 이상) 투자 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% 보조	-	0.7
지방국립대 무상화, 미래인재성장자금	지방 국립대(30개교) 등록금 전액 지원 21개 지방국립대 자율투자자금 지원(학교당 200~500억원)	-	0.9
거점국립대 패키지 + 5극3특 국립대병원 지원	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패키지 지원(3개교, 학교당 800억원) - 시설·인력 확충, 특화육성 등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	0.3	0.5
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	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	-	0.7
목숨을 살리는 적극복지	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(+6.7%),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통합돌봄 사군구 최대지원액 인상,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	23.9	29.0

① K-반도체 강국, 초격차 지속

1.3→3.4조원

【생산기반】 “반도체 특별회계로 안정적 투자기반 구축” 0.2→2.0조원

- (생산거점) 수도권·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(0.4조원)
 - (수도권) 용인·평택 팹(Fab)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(0.1조원)
 - (비수도권) 서남권 클러스터 신속한 착공('28~) 전폭 지원*
- * 서남권 반도체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적극 뒷받침(총 0.7조원 '27년 0.3조원)
- (투자기반) 신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(1.5조원),
신규 「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」 신설 등 안정적인 투자기반 구축
 - 국민성장펀드와도 연계하여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 유도(0.1조원)

【초격차 생태계】 “원천기술·인재양성 전주기 지원” 1.1→1.3조원

- (원천기술) 국산AI 반도체 고도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
 - (신규 K-AI 반도체) 국산 NPU*와 AI모델·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K-AI 반도체의 실전 활용도 제고(200억원)
 - * NPU: GPU 대비 전력소모를 낮추면서 개별 AI서비스에 특화 가능한 반도체
 - (신규 상생팹)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·실증을 위한 R&D 상생팹 구축(민관 공동출자, 국비 480억원) 및 중소 팹리스 기업 연계지원
- (기업·인력지원) 성장 단계별·권역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 - (기업) 경쟁력 있는 K-AI 반도체 기업 대상 신규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(0.1조원) 및 권역별 설계-실증-생산기반 구축 지원
 - (인력) 신규 남부권(서남·동남·대경권) 반도체혁신벨트 특화인력 양성(670명) 및 신규 AI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(1,320명) 양성 투자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년	비고
-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	-	15,000	·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및 생태계 구축 등 4년간 6조원 지원
- 반도체 핵심기술 R&D	4,612	5,466	· 화합물반도체R&D 상생팹 구축, K-AI 반도체 및 극미세·적층형 반도체 R&D 등

2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

0.9→3.1조원

- (실증·보급) 산업 생산성 혁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민간·공공 **신규 8대 핵심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** 지원('27년 0.5조원, 총 2.6조원)

< 8대 분야별 피지컬 AI 실증 프로젝트 주요내용(단위: 억원) >

		총사업비	'27년
제조	√ 공급망 협력사들의 AI 솔루션 및 국산 휴머노이드 보급	8,624	1,182
스마트팩토리	√ 중소 제조공장 내 수작업 공정 대체를 위한 로봇 기반 자동화	5,387	1,728
건설	√ 건설현장에 AI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해 인증 지원	6,509	585
농업	√ 농가 대상으로 AI 국산 농업로봇 시범도입	3,296	208
공공 국방	√ 탄약 운반 등 위험임무 대체를 위한 국산 로봇 시범도입	430	430
공공 돌봄	√ 장기요양·장애인거주시설 등 국산 돌봄로봇 시범도입·실증	803	377
공공 물류	√ 우체국 소포를 분류·포장하는 국산 로봇 시범도입	480	260
항만	√ 하역·이송 등 지원하는 피지컬 AI 국산 로봇 시범도입	105	74

- 공공의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AI로봇 2천여대 도입

* (연구·교육) 650대, (국방) 214대, (경찰·소방) 369대, (돌봄) 200대, (농식품) 210대

- (R&D) **신규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***(0.3조원), **신규 폴스택 AI팩토리**(0.1조원), 로봇 생태계 고도화(370억원) 등 피지컬 AI 핵심기술 확보(1.5조원)

*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교육훈련 현장에 활용하는 AI 시스템 개발비용 지원

- (데이터) 피지컬 AI 학습용 데이터 생산*을 위해 트레이닝센터(400억원), 데이터팩토리(450억원)를 구축하고, 데이터 라이브러리(590억원)로 공동 활용

3 국산 AIDC* 산업생태계 조성

0.2→0.5조원

* (AI Data Center) 대규모 GPU와 고전력·냉각 설비를 갖춘 AI 연산 전용 데이터센터

- AIDC 핵심부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**신규 테스트랩**을 구축(668억원)하고, **신규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**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사업화 지원(210억원)
- **신규 AIDC 서버·전력·냉각 등 소재·부품·장비**, 클라우드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R&D 투자도 추진(1,545억원)

4 전력 · 용수 · 산단 인프라 전폭 지원

2.1조원

【전력】 “국가 재정이 뒷받침하는 전력망 속도전” 1.5조원

- (송전망) **신규** 반도체 산단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중 송전망,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선제 투자(881억원)
 - **신규**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입지에 적합한 변전소 설치 지원(658억원)
- (계통)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및 잉여 전력 저장·활용 확대를 위해 **신규** 송·배전단 ESS 구축 등 계통 안정화 적극 지원(6,108억원)
- (투자여력) 전력망 투자재원 보강을 위해 **신규** 한국전력공사 출자(5,000억원) 및 **신규**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(3,500억원)

* 한국전력 자본금: (기준) 3.2조원 → (변경) 3.7조원(+0.5조원)

(단위: 억원)

	'27안	~30년	비고
- 송전선로 지중화	27	0.5조원	· 송전선로 지중화율 상향(13→50%) (~'36)
- 수요유치형 변전소	658	1.3조원	· 전국 44개 345kV 변전소 구축 (~'35)
- 송전단 ESS 구축	5,724	9.0조원	· 10GW 규모 ESS 구축 (~'30)

【용수】 “서남권 · 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”

0.4조원

- (용수공급)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·협력업체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**신규** 용수공급·수자원시설 확충(1,277억원)
- (투자여력) 투자재원 보강을 위해 **신규** 한국수자원공사 출자(2,50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7안	~30년	비고
-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	1,196	1.3조원	· 133만톤/일 산단 공급 (~'32)
-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	81	0.2조원	· 38만톤/일 산단 공급 (~'33)

【산단 등】 “새만금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”

0.2조원

- (산단 등) 새만금산단에 **신규** 장기임대용지 및 **신규** 공동 물류센터 조성하고, 지역간 연결도로,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로 접근성 향상 지속 지원

【AI 모델】 “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”

2.2→5.2조원

- (신규 프론티어 AI 모델)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GPU(베라루빈) 1만장 + 데이터 + 인재 집중 지원(4.7조원)
 - 공모·평가를 통해 핵심 기업을 선정하여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되, 그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출자 방식으로 사업구조 설계
 - * (GPU) 최상위급 GPU(베라루빈) 1만장 구매(3.9조원) + (데이터)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(0.8조원) + (인재)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자 20명 유치(250억원)
 - 프론티어 모델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 확보된 정부 GPU(0.7만장) 우선 투입, 산·학·연 민간임차(0.8만장) 등 통해 차질 없이 지원
- (특화 AI 보안모델) 최상위급 AI를 이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독자적 AI 보안모델 개발(700억원)
 - 모델 개발 전까지 보안 공백 방지를 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(1만개) 대상 신규 AI 보안솔루션 구독료 한시 지원(500억원)

【모두의 AI】 “AI 에이전트 서비스 + 교육 역량 강화” 14→24조원

- (신규 모두의 AI)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·제공(0.25조원)
 - 챗봇과 함께 국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주는 공공 AI 에이전트 및 여행·돌봄 등 민간 AI 에이전트 제공
 - * (공공 예) 주민등록발급, KTX 예매,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를 AI가 탐색 및 신청 (민간 예) 여행계획시 AI가 교통수단, 숙박장소 등을 맞춤형으로 탐색 및 예약
- (AI교육) 전 국민 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초·중·고·대학생, 구직·재직자, 일반국민(390만명) 대상 맞춤형 교육·훈련·재교육 지원(2.1조원)

< 전 국민 생애주기 AI 교육·활용 사업 >

	①기초교육	②대학교육	③취업·연구	④평생학습
'27년 예산(2.1조원)	280억원	0.3조원	1.6조원	0.2조원
수혜자(390만명)	4만명	36만명	71만명	279만명
주요 사업	AI 영재학교	AI 중심·거점대학	AI 부트캠프	지역AI 평생교육

※ 교육교부금을 통한 초·중·고·대생교원 300만명 공무원 AI 교육(비재정) 30만명 포함시 총 720만명 지원

['27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6년	'27안
반도체	반도체 특별회계	—	신설 2.6조원
	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	—	1.5조원
	K-AI 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	—	900억원
피지컬AI	8대 분야 현장 실증	—	0.5조원
	K-로봇 공공구매	—	1,743대
AIDC	테스트랩 구축	—	10MW, 668억원
	사업화·수출지원	—	90개 기업
전력·용수·산단	전력인프라 구축	—	345kV 변전소 44개 구축(∼'35)
	서남권·충청권 용수인프라 구축	—	(서남) 133만톤/일 용수공급(∼'32) (충청) 38만톤/일 용수공급(∼'33)
	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공급	—	12.1만평
AI	프론티어급 AI 모델	—	4.7조원 (GPU 1만장)
	모두의 AI	—	전국민 무제한·무료로 AI Agent 서비스 제공
	AI 교육	290만명	390만명

2 미래 성장엔진 확충

① 포스트 반도체, 첨단전략산업 육성

36.2→41.4조원

【첨단전략산업】 ‘NEXT 전략기술 투자 등 초격차 확보’ 11.2→15.0조원

-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을 주도할 **NEXT 10대 전략기술분야*** 등을 집중 지원하여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

* 「국가전략기술육성법」 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10대 핵심 기술분야 (AI, 첨단로봇·모빌리티, 첨단바이오, 양자, 반도체 등) 55개 중점 기술

		'26년	'27년
우주항공	√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착륙·발사체 개발 등	1.2	1.8조원
바이오	√ 유전자 세포치료제,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	1.4	1.7조원
모빌리티	√ 자율차 실증차량 지원(200→3,000대), UAM 실기체 3개 도입 등	0.2	1.1조원
원자력 등	√ 핵융합, I-SMR 등 미래 유망 에너지원 투자 확대	0.5	0.7조원
방산	√ 스타트업 육성(202→316억원), 수출지원(1,221→1,479억원)	0.3	0.4조원

【R&D】 “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강화” 35.5→39.5조원

- (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)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,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7대 SEED*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

* 7 SEED(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) : SMR, 핵융합, 재생에너지, 양자, 우주·항공, 첨단바이오, 첨단공급망(핵심광물·소부장)

- (R&D 혁신) 지역 산·학·연 기반의 지역형 R&D 투자 확대 및 기업의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혁신적 **신규투자형 R&D*** 도입

* 정부가 기업 R&D를 지원할 때, 단순 출연이 아닌 투자(지분확보) 방식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R&D 지원 모델

- (지역형 R&D) **신규** 5국 3특 성장엔진프로젝트(1,400억원), 과학기술 혁신지원(1,512억원) 등
- (투자형 R&D) **신규** 화합물반도체R&D상생패(400억원), **신규**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(200억원) 등

- (연구생태계 지원) 출연연의 핵심역량을 전략연구사업에 집중하고, 안정적 연구 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 투자를 통해 연구생태계 고도화

- (전략연구사업) 핵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연구사업확대(100→152개, 0.5→0.7조원)
- (기초연구) 개인기초연구(2.3→2.4조원), 이공계학술연구기반구축(0.62→0.65조원) 등
- (인재양성)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(150→450억원), 인재활용확산지원(854→1,088억원) 등

【재생에너지】 “태양광·햇빛소득마을 보급 확대” 1.3→2.8조원

- 공장지붕·영농형 **태양광 설치**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(0.9→1.8조원), **햇빛소득마을** 확산(700→2,200개소) 등 차질없이 지원
 - 재생에너지 **발전효율 향상** 등 R&D 투자 강화(0.1→0.2조원)
- 민간의 에너지 전환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빛소득 **협동조합 보증 신설**(249억원), **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확대**(400→60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재생에너지 금융지원	6,480	15,108	· 태양광 2.1GW, 풍력 1.2GW 규모
- 재생에너지 보급지원	2,143	2,967	· 가정용 태양광 20만 가구 등
-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	-	285	· 마을당 평균 650kw, 신규 1,500개소
- 무탄소 에너지 보증	500	949	·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보증 신설 249억원

【탄소중립】 “무탄소 에너지 수요 견인”

2.9→3.8조원

- 최근 수요 급증세*를 고려하여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, **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43만대**로 물량 대폭 확대(30→43만대)
 - * (신차 중 전기차 비중) '25년 상반기 11.1% → '26년 상반기 23.3%(+12.2%p)
 - ** 무공해차 보급지원: ('25) 2.3조원 / 32만대, ('26) 2.3조원 / 30만대, ('27) 3.0조원 / 43만대
- 단독 주택, 복지시설 대상 **히트펌프 보급을 5배 확대**하고(157→635억원), 공동주택·산업단지 **대규모 히트펌프 시범사업 실시**(284억원)
- 온실가스 감축 기여, 환경기술 사업화 등 녹색 기업에 융자·보증·펀드 공급을 위한 **녹색금융 투자 확대**(5,962 → 7,447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무공해차 보급사업	22,845	30,090	· 전기차 보조금 물량(30→43만대)
- 히트펌프 보급사업군	157	919	· 공동주택 히트펌프 시범사업 480세대 등

【창업】 “아이디어가 창업이 되는 국가창업시대” 1.9→3.5조원

- (모두의 창업) 선발인원(1.5→2만명) 및 사업화자금 확대(200→500만원) 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(0.4조원)
 - 신규 판로연계·후속사업화 지원 추가 등 창업사업화 뒷받침 강화
- (창업도시)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4→10개소로 확대하고, 지역창업 패키지(511→1,700억원), 지역성장펀드(2,000→2,850억원) 등 집중 지원
- (투자·규제) 창업펀드 출자(2,400→4,800억원) 및 창업기업 지원용자(1.3→1.7조원)를 대폭 확대하고, 신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지원체계 운영*
 - * 협·단체 기반이 약한 창업기업을 위해 규제애로 발굴·실증·제도개선 등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모두의 창업	(추경등 2,631)	4,411	· 사업화자금 확대(1단계 500만원, 2단계 3,000만원)
- 지역창업패키지	(추경 511)	1,700	· 10개 도시, 500개사 지원(기업당 최대 5억원)
- 모태펀드(지역, 창업)	2,400	5,650	· 지역성장펀드 전국 확산, 창업펀드 2배 확대

【재도전】 “실패 경험이 성장 자산이 되는 나라” 0.6→1.0조원

- (재기 발판) 전국에 신규 재도전 성공학교를 신설(19개), 재창업자(500개사) 실패원인을 진단하고, 맞춤형 입주·창업보육 지원(595억원)
- (도약 지원) 재도전 성공패키지* 확대(185→320개사), 신규 대·중소 공동 사업전환 지원(100개사) 등 성실 실패기업의 재도전 성장사다리 강화
 - * (지원대상) 재창업기업 → 재창업기업+위기기업 등, (지원한도) 1→1.5억원
- 우수 재도전기업을 선별하여 바우처·컨설팅 등을 추가지원하는 신규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 추진(130개사, 최대 2억원, 334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중소기업 재기지원	150	1,398	· 재도전 성장사다리 총 950개사 지원
- 재도약지원자금(용자)	6,125	8,400	· 재창업·사업전환·구조개선 지원 용자 확대

【 기초예술인 】 “창작활동 및 창작안전망 구축”

0.6→0.9조원

- (창작안전망) 예술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(280→600억원), 산재·국민연금 등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(15→311억원)
- (창작지원) 예술인 초기 성장 단계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지역의 신진·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신설(215억원)

* 전국 384개 프로젝트(팀당 3~5명)에 약 5,600만원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	280	600	· 생활자금(2,000→4,286명), 전세자금(117→250명)
-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	15	311	· 산재보험료 등 지원(4,400→39,000명)
-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	-	215	· 예술 프로젝트별 5,600만원 지원

【 K-문화·관광 】 “글로벌 경쟁력 강화, 지방관광 활성화”

2.2→2.8조원

- (K-콘텐츠) 장르별 기획개발 및 사업화·유통·해외진출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, 금융지원 확대(1.5→2.2조원)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(관광산업) 방한 관광객 지방 확산을 위해 신규5대 메가관광권 조성(659억원), 민간 주도 신규패노메논 행사 연계 K-컬처 확산(150억원) 등 지원

- 현재 5성급 호텔이 없는 지방에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특별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설(1,523억원, 3개소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콘텐츠 정책금융	4,688	6,668	· 펀드(4,300→6,030), 보증(338→438) · 이차보전(50→100), 신규융자(100)
- 메가 관광권	-	659	·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(105)
- 패노메논* 연계 K-컬처	-	150	· 중소 K-컬처 기업 참여 지원(61) · 한국관광홍보(77)
- 지방 5성급 호텔 건립	-	1,523	· 1개소당 2년간 1,500억원, 3개소 신축

* K-팝을 중심으로 공연과 시상식, 체험 행사를 한데 모은 대규모 K-컬처 축제

【성장·도약】 “기업 성장사다리 대폭 강화”

4.6→5.4조원

- (혁신성장) ^{신규}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선발, 관계부처 사업을 다년도·맞춤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 신설
 - 중소기업 R&D 투자를 확대(2.2→2.5조원)하고, R&D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지원 및 보증공급(0.3→0.7조원) 확대
 -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도 강화(134→247억원)
- (도약) 유망 중소기업에 전담 디렉팅, 전략·기술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성장단계별로 확대·개편(595→1,642억원)
 - (점프업 100) ^{신규}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최대 3년, 바우처 年 2억원
 - (점프업 500)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최대 3년, 바우처 年 2.5→2.8억원
 - (점프업 1,000) ^{신규}매출액 1,000억원 이상 기업에 최대 2년, 바우처 年 7.5억원
- 기업성장용자 공급 확대(2.1→2.5조원), AX 전환 지원(0.4→0.7조원), ^{신규}마케팅지원 패키지(800개사) 신설 등 중소기업 성장 적극 뒷받침

【수출 지원】 “중소·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뒷받침” 08→1.2조원

- (해외진출) 무역장벽 극복 및 수출 성장 촉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(0.3→0.5조원) 및 K-수출스타*(402→734억원) 대폭 확대(0.7→1만개사)
 - * 마케팅(KOTRA)·인증(KCL)·금융(무보)·R&D(KIAT) 등 패키지 지원(100→360개사)
- 중소기업의 해외거점, 영업·물류 역량 보완을 위한 해외지사화·공동물류센터, 해외전시회(한국관) 등 지원 강화(1,605→2,259억원)
- (소비재·조선)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푸드 등 K-소비재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,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4,500억원 공급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중소기업 수출바우처	1,502	3,137	· 기본형(5,000개사), 성장형(3,000개사) 지원
- 수출역량강화	1,605	2,259	· 해외지사(4,384→5,661개사), 물류센터(302→320개) · 인증(628→914개사), 전시참가(3,002→4,503개사) 등
- 글로벌 K-푸드 육성	888	2,437	· ^{신규} K-식자재 해외진출 용자(1,360억원) 등

['27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6년	'27안
첨단 전략산업	미래모빌리티	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	3,000대
	2030 달착륙	0.2조원	0.6조원
	첨단 바이오	1.4조원	1.7조원
	핵융합, SMR 등	0.5조원	0.7조원
에너지 대전환	햇빛소득마을	700개소	2,200개소
	전기차 보조금	30만대	43만대
	히트펌프 보급	2,617대	11,619대
모두의 창업	모두의 창업	인원 1.5만명 자금 200만원	2만명 500만원
	재도전 응원 프로젝트	—	130개사 * 기업당 최대 2억원
문화강국	지역 예술인 창작지원	—	프로젝트당 5,600만원
	콘텐츠 산업 정책금융 공급규모	1.5조원	2.2조원
	메가관광권 조성	—	5대 권역 659억원
중소기업 성장사다리	점프업 프로그램	(점프업 500) 200개사	(점프업 100) 100개사 (점프업 500) 300개사 (점프업 1,000) 20개사
	수출바우처	7,789개사	10,893개사

3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

① [교육] 첨단인재 양성, AI 역량 강화 64→8.0조원

【역량】 “AI·첨단 부트캠프 인재양성 2배 확대” 64→7.3조원

- 대학생부터 미취업·비재학 청년까지 집중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인원을 1.3→2.5만명으로 2배 수준 확대
- 기업·공공기관 등이 제시한 현장의 실제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**신규문제해결 부트캠프**(1,400억원, 2만명 이상) 도입
- AI가 대학생 기본역량이 되도록 기본교육을 2배 이상 확대(88→202억원)하고, 대학생 AI 활용을 위한 **신규공동구독 지원**(20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인재양성 부트캠프	1,342	3,999	· 첨단 1,893 + 도약 706 + 문제해결 1,400
-대학생 AI 기본활용지원	88	402	· 기본교육 202 + AI공동구독 200
-BK21 등 연구지원 확대	8,890	10,345	· 석·박사 연구인재 교육·연구지원 강화
-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	-	300	· 국·사립 우수대학 연구기반 지원
-맞춤형 국가장학금	51,161	51,820	·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역 지원 확대

【경력】 “청년 경력 제공·AI 역량 제고” 0.7조원

- 학기중 산업현장에서 경험을 학점·경력으로 인정받는 **신규인턴 학기**를 도입하여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전 첫경력 제공(0.5조원)
- 대학을 AI 재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**신규AI 재도약대학**(0.2조원)을 운영하여 청년·직무전환자 등의 AI 전환 역량 제고 지원
- 지역에서 AI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**신규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**(235억원)을 신설하고, **신규청년 전용 평생교육이용권**(95억원) 도입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청년 첫경력 프로젝트	-	4,650	· 대학생 6만명에게 인턴학기 지원
-AI 재도약대학	-	2,070	· 대학을 통해 2만명 재교육 지원
-지역평생교육 활성화	-	235	· 시군구 70개 평생교육 제공
-청년전용 평생교육이용권	-	95	· 청년 전용 평생교육이용권 도입

② [일자리·창업] 청년 일경험·훈련 등 56→72만명 지원 3.6→5.1조원

【일경험·훈련】 “첨단 분야 직업훈련 2배 확대” 1.2→2.1조원

- 대기업 주도 **신규**K-뉴딜아카데미, AI 특화 K-디지털 트레이닝, 반도체·미래모빌리티 등 첨단·선호 분야 훈련 확대(6→12만명)
- 국내외 인턴(2.6만명) 등 일경험 확대(4→11만명)를 통해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 前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K-청년뉴딜아카데미	-	4,895	· 대기업 주도 역량훈련(5만명)
- K 디지털 트레이닝	5,213	6,089	· AI 특화 과정 물량 확대(1→2만명)
- AI 펠로우십 프로그램	-	284	· 4대 과기원·제조기업 AX 연계(500명)

【구직지원】 “맞춤형 구직지원으로 취업연계 강화” 1.7→1.8조원

- 청년의 정규직 채용·근속과 소득보전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인원 확대(10.5만→13만명)
 - * (수도권) 5.5 → 5.9만명 (지방·인구감소지역) 5 → 7.1만명
 - 정부 역량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연계 트랙을 신설하고 청년 인센티브 대폭 강화(수도권 청년 지원 신설, 연 최대 360→900만원*)
 - * 권역별 연간지급액(최대 2년): (수도권) 240만원 (지방·인구감소지역) 720~900만원
-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 맞춤형 구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**신규**청년첫취업지원 제도를 분리·신설(0.4조원, 16만명)

- (**신규** 청년플레이그라운드) 201억원, 구직 활동 온·오프라인 플랫폼
- (**신규** 폴리텍 디딤돌 캠퍼스) 560억원, 취·창업 복합지원 공간 조성

【창업】 “창업안심보험 신설 + 보험료 60~80% 지원” 0.8→1.3조원

- 휴·폐업 대비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**신규**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지원 (최대 80%, 4.8만명), **신규**청년창업패키지로 사업화 지원(1.5억원, 200명)
- 청년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창업자금(2,000→4,000억원), 청년창업펀드(200→400억원) 2배 확대

3 [자산]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을 빈틈없이 지원 2.9→4.2조원

생애주기별 지원	①성장기	②군복무	③구직	④사회진출
'27년 예산(4.2조원)	1,465억원	2.1조원	1,027억원	1.9조원
수혜금액	6천~1억원	2,000만원	무이자 대출	2,500만원
주요 사업	우리아이자립펀드	병내일준비적금	청년기회자금	청년미래적금

[성장·구직] “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” 1.9→2.3조원

- (성장)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**신규 우리아이자립펀드** 신설(0.1조원, '26.9.1일생부터 적용)
 - * 만기 시 최대 6천만원~1억원 수령(수익률 연 5~10% 가정)
- (구직) 미취업 청년들이 최대 2,000만원 대출후 취·창업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낮은 금리(2~4%)로 상환하는 **신규 청년기회자금** 0.5조원 공급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우리아이자립펀드	-	1,465	· 출생~18세까지 부모·공동 아동 자산형성
- 청년기회자금	-	1,027	· 대출후 취·창업전까지 이자면제
- 병내일준비적금	16,587	18,143	· 전역인원 18만명 대상 매칭 지원금 지급

[사회진출·정책] “모든 청년에게 청년미래적금 지원” 1.0→1.9조원

- (사회진출)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**청년미래적금 확대·개편**(0.7→1.7조원)
 - 청년 지방정착 유도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
 - * 가입요건(年 소득 7,500만원 이하) 폐지(모든 청년 가입可) → 모든 청년 지원
 - ** 정부 기여금 혜택 확대 : 우대형 12→15%,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12→25%
- (정책)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프로그램 지원(재정·세제 패키지)

- (국민참여성장펀드)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20→50%로 확대
- (생산적금융 ISA) 국내 주식·펀드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+ 납입금 소득공제

4 [주거] 청년 선호주택 공급 확대, 주거부담 완화 9.6→18.5조원

【공급】 “청년 공공임대주택 10.6만호 공급” 9.4→18.1조원

- '27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'26년보다 3.5만호 확대하여 10.6만호를 공급하고, '30년까지 총 45만호+α를 우선 지원
 - 역세권 입지, 넓은 평수의 **신규보편형 공공임대주택** 2만호 공급
 - 비수도권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**신규청년지원주택** 1만호 공급

【부담 경감】 “월세→전세→자가의 주거사다리 강화” 0.2→0.4조원

- (**월세**)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, **신규월세** 부담 경감을 위해 **반전세**에 대한 **대출상품** 신설
 - (청년월세) 소득요건 기준중위 60→100% 확대, 차상위 이하 **최장 48개월** 지급
 - (청년 전월세결합보증) 반전세 거주시 전세+월세 전체에 대한 대출 지원 신설
- (**전세**)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을 위해 ‘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’ 대상을 확대하고, 보증금·지원한도도 상향
 - (소득요건) 일반 청년 기준 연소득 5천만원 → **기준중위소득 200%**(약 6.6천만원) 이하 (대상주택) 보증금 3억→**수도권7억·비수도권5억원** 이하 (지원한도) 최대 40만원→**50만원**
- (**내집마련**) 월세 수준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**신규청년미래보금자리론**을 신설하고,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청약기회 확대
 - (청년미래보금자리론) 非아파트(4억원↓) 구매시 **우대금리 지원**(**최대 △2.1%**), 생애최초 혜택 유지
 - 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) 가입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 → **7천만원** 이하로 확대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보편형 공공임대주택	-	38,300	· 청년선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
- 청년월세 지원	1,300	2,319	· 소득요건 기준중위 60→100% 확대
- 청년미래보금자리론	-	597	· 금리 인하 위한 이차보전 지원

5 [혼인·출산·양육]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 신설 5.3→6.1조원

○ 역진적 조세지출을 재정전환하고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여,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·출산·양육 3종 패키지 신설

① (혼인)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인세액공제를 **신규 혼인지원금**으로 전환,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 지원(생애 1회)

② (출산) 출산·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와 통합하여 **신규 아이맞이(출산)지원금** 신설(1~2천만원, 1년간 4회 분할지급)

- 다자녀일수록 지방에 살수록 아이맞이지원금을 확대*하여 두텁게 지원

* (기본) 첫째 1,000, 둘째 1,200, 셋째이상 1,500만원 (지방우대) 첫째 1,500, 둘째 1,700 셋째이상 2,000만원

③ (양육) **아동기본수당**(0~12세)을 도입하여, 기존 아동수당 대비 2~3배로 확대·개편*, 0~1세는 가정양육 시 月 30만원 추가 지급

* (기존) 月 10~13만원 → (변경) 기본 月 20만원 / 지방우대 月 30만원

〈 혼인·출산·양육 시 아동 1인당 혜택 〉

(단위: 만원)

현 행 ('26년 기준)	개 편
(혼인세액공제) 1인 최대 50	(혼인지원금) 부부 100
(출산·입양세액공제) 첫째 30/둘째 50/셋째이상 70	(아이맞이(출산)지원금) 1,000~2,000
(첫만남이용권) 첫째 200/ 둘째이상 300	
(부모급여) 0세 月 100, 1세 月 50	(아동기본수당) 0~12세 月 20~30
(아동수당) 0~8세 月 10~13	

※ 지원총액: (개편전) 3,690~4,298만원 → (개편후) 4,940~7,500만원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년	비고
- 혼인지원금	-	1,663	· '27.하반기 시행 ('27.1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 소급 지원)
- 아이맞이(출산)지원금	4,111	6,981	· '27.7월 시행
- 아동수당(아동기본수당 포함)	24,822	29,272	· 아동기본수당 '27.7월 시행
- 부모급여	23,726	22,695	· '27.6.30일 이전 출생아(月 0세 100, 1세 50만원)

6 [생활·문화]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여건 개선 0.4→1.4조원

[문화] “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으로 확대” 0.04→0.8조원

-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활용처를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(7,925억원)

* (기존) 19~20세 28만명, 생애 1회 → (개편) 19~34세 919만명, 매년 (10/15만원)

[생활] “교통비·식비 등 생활비용 경감” 0.4→0.6조원

-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“모두의 카드” 지원 대상(총 537→955만명) 및 예산 대폭 확대

- 미래세대 지원 확대를 위해 **신규** 13~18세 청소년 지원 유형 신설

-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정부지원 단가 인상*(2→3천원) 및 물량 확대(540→570만식)를 통해 양질의 식사 지원

* 학생 1천원, 국가 3천원, 지방정부·학교가 추가 부담하여 6~8천원짜리 식사 제공

-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·고립은둔 청년에게 **신규 회복 프로그램**(0.6만명)을 제공하는 등 위기청년 지원 적극 추진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대중교통비 환급 (청년분)	2,984	4,314	· 가입자 증가(총가입자 '26 537 → '27추정 955만명) · 시차출퇴근 환급률 인상('26추경) 상시화
- 천원의 아침밥	111	175	· 국비지원 단가(2→3천원), 지원물량(540→570만식)
- 청년회복 성장사다리	-	159	· 청년미래센터 중심 가족돌봄· 고립은둔청년(0.6만명) 회복프로그램 지원

[군복무] “병 상해보험 및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” 0.01조원

- 군 복무 청년(현역병, 상근예비역)의 복무기간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**신규 병사 단체 상해보험** 도입(69억원)

- **신규** 의무복무한 모든 청년 제대군인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 후 18개월 동안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(75억원)

['27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내용	'26년	'27안
교육	인재양성 부트캠프	1.3만명	4.5만명
	AI 재도약 대학	—	2.0만명
일자리·창업	일경험·훈련·구직지원 등	56.4만명	72.2만명(+15.8만명)
	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청년인센티브)	비수도권, 연 최대 360만원	전국 확대, 연 최대 900만원
자산 형성	우리아이자립펀드	—	출생~18세까지 적립
	청년기회자금	—	취·창업 준비기간 무이자 대출
	청년미래적금	0.7조원	1.7조원
주거 안정	공공임대 공급	7.1만호	10.6만호
	주거사다리 지원	183만 가구 청년월세지원	235만 가구 요건 완화
		—	전월세결합보증
		—	청년미래보금자리론
혼인· 출산· 양육	혼인	혼인세액공제	혼인지원금 (생애 1회 100만원)
	출산	출산·입양세액공제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	아이맞이(출산)지원금 (1~2천만원(지방우대))
	양육	아동수당 (월 10~13만원)	아동기본수당 (월 20~30만원)
생활· 문화	청년문화예술패스	(대상) 19~20세, 생애 1회 (활용처) 공연·전사·영화·도서	(대상) 19~34세, 매년 (활용처) +체육

4 K자형 양극화 대응, 모두의 성장

①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

16.1→33.0조원

【산업】 “5극3특 성장엔진 육성으로 지방주도 성장” 0.2→9.8조원

- (성장엔진)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대규모 기업투자 보조, 지역자율형 R&D 프로젝트, 사업화 패키지 지원(0.9조원)
 - 지역 산업여건, 기업 투자계획, 성장잠재력, 국가산업 전략성을 고려하여,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(권역별 3~4개, 총 25개)
 -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%를 지원하는 **신규성장엔진특별보조금** 신설(0.7조원)
 - (지원대상) 대기업 3,000억원, 중견기업 1,000억원 이상 대규모·전략적 지방투자
 - (보조율) 설비투자액의 최대 50% 지원
 - 보조율 산정시 투자규모, 전후방기업 동반투자, 고용창출, 지역경제 기여 등 고려
 - (지원방식)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(지방비)의 2배~5배를 국비로 지원
 - 배율 산정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노력, 지방우대지수, 행정통합 우대 등 고려
- (지역AX) 권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AI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연계하여 지역주도형 AX 혁신 생태계 구축(0.2→0.4조원)
 - * 경남(정밀제조), 전북(AI팩토리), 광주(모빌리티·에너지), 대구(로봇·바이오)
- (지방재정) 지방 산업·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
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**신규통합 인센티브 재원**(5조원) 반영
 - 지역의 성장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**신규지방미래성장지원금** 지원(3.5조원)

【의료】 “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”

0.8→1.3조원

※ 건강보험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'27년 +3.6조원 별도

- (지방주도) 지방정부가 지역 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·추진하는 **신규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*** 신설(3,600억원)
 - * (중앙) 표준 사업유형 제시 → (지방) 시도별 재원 내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

- (거점육성)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5극 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·장비, 필수인력, AX 전환 등 집중 지원(1,154→2,551억원)
- (인력기반) ^{신규}지역의사제(490명) 학자금·주거비 지원 신설(44억원),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^{계약형}지역필수의사, 시니어의사 채용지원도 확대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	-	3,600	· 시도별 자원 내 자율적 사업 추진
-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	1,154	2,551	· 지방국립대병원 특화분야 육성 1,200억원 등

【교육】 “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·연구 지원” 0.1→1.6조원

- (장학금)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'27년 신입생부터 ^{신규}지방국립대(30개교, 의·치·약·수 제외) 등록금 전액장학금 지원(0.2조원)
 -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 개편(800→1,150억원)하여,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 학생 등 1만명 신규 선발
- (인프라) 21개 지방국립대(교대 제외)가 석학유치·첨단연구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^{신규}미래인재성장자금 지원(0.7조원)
 -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, ^{신규}사립대 이공계 교육·연구 인프라 구축(0.6조원), ^{신규}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(300억원)

【생활인프라】 “주민생활 인프라·문화향유 증진” 0.1→1.7조원

- (주민생활) ^{신규}지역이 원하는 복지·문화 등 다양한 기능*을 하나로 복합·집적화한 ‘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’ 건립 지원**(90개, 1.5조원)
 - * (예) 커뮤니티기능(건강·문화·휴식 등), 돌봄기능, 창업·일자리기능 등
 - ** (신축) ^{최대}200억원(60개), (리모델링) ^{최대}100억원(30개) 정액 지원
- (문화향유) 질 높은 전시·공연의 지방 개최 대폭 확대(782→931회)
 - ^{신규}노후 원도심의 유휴공간 등을 임차·리모델링하여 ^{신진작가} 등 청년의 문화 콘텐츠 창작·창업·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(7개소, 343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	-	15,005	· 신축 200억원/개소 리모델링 100억원/개소
- 전시·공연 확대	932	1,289	· 공연·전시 유통 지원 등

【소상공인】 “안전망 대폭 확충 및 도약 지원”

2.0→3.5조원

- (특별채무조정)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**신규**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(0.7조원)
- (사회안전망) **신규**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신설(月50만원, 3개월), **신규** 산재보험료 지원(보험료의 50~80%, 1.2만명) 등 사회안전망 강화
 - 건강검진 시 대체인력 인건비 등 **신규** 건강돌봄 지원(최대10만원, 200만명)
- (경쟁력 강화) **신규**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원(5천원, 2,400만장), 푸드·뷰티 등 생활밀착형 제품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(1억원, 800개사)
 - AI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AI 인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**신규** AI·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(8,000건)

- (온라인 판로) TOPS 프로그램 후속 연계 홍보·브랜딩 지원 확대(30→60개사)
- (사업 고도화) 로컬·혁신 기업 아이디어 고도화·홍보·사업화 자금 등(534→900개사)
- (민간투자 연계 자금) 민간 투자금의 최대 3배(2억원 한도) 매칭 지원(300→450개사)

- (매출기반) 지역사랑*·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(29.5→30.1조원), 특성·테마별 시장·상권 육성**(신규 139개소, 최대 50억원)으로 매출 기반 확대

* 국비지원율 : (현행) 3 / 5 / 7% → (개편) 3% / 6% / 8% / 9%

** 백년시장(3개), 문화관광(30개), **신규** 생활소비(40개), 글로벌(6개), 로컬테마(10개), 유망골목(50개)

- 온누리 전통시장 할인을 확대(디지털 7→10%), 폭염 대비 냉방기 등 안전관리 패키지 확대(80→340개소)로 전통시장 소비 환경 개선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금융지원 사업군	1,681	9,714	· 특별 채무조정 등 7,000억원 · 지신보 재보증 2,714억원
- 건강돌봄 지원	-	2,050	· 200만명, 최대 10만원
- 상생배달앱 지원	-	1,240	· 5천원 할인쿠폰 2,400만장
- 경쟁력 강화 사업군	892	2,098	· 생활문화 제품개발·사업화(800억원) · 로컬·혁신기업 사업 고도화(486억원) 등
- 지역사랑상품권 + 온누리상품권	16,080	18,329	· (지역사랑) 25.6조원 발행 + 국비지원율 상향 · (디지털 온누리) 전통시장 할인을 상향

【농산어촌】 “농어촌 기본소득 등 활기찬 농산어촌” 74→10.9조원

- (정주여건) 농어촌 기본소득을 대상지역(69개)의 절반까지 확대(17→35개)하고,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율 상향(0.2→1.2조원)
 - * 보조율: (現) 국비40%, 광역30%, 기초30% → (改) 국비50%, 광역25%, 기초25%
- 친환경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익직불금(농업) 3조원 시대 진입
 - (농업) '밭' 면적직불의 '논' 수준 상향(+25%), 전략작물 확대(하계조사료 +30만원/ha)
 - (수산) 먼섬 거주 어가 대상 조건불리직불 단가 인상(80→130만원)
 - (친환경) 밭·과수 단가 인상(+50만원/ha), 내수면어가 친환경 배합사료직불 도입
 - (동물복지) 산란계(1.5원/개)·돼지고기(6,800원/마리) 대상 동물복지축산직불 신설
 - (농지이양) 지급단가 +10% 인상(600→660만원/연)으로 고령농 은퇴 및 세대 전환 유도
-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족분(0.7조원)을 '30년까지 전액 지원,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확산(0.1→0.2조원)으로 농어촌 이동권 보장
- (경쟁력 강화) 농업 규모화를 위한 공동영농 패키지 도입(0.1조원), 자율주행 트랙터, 운반로봇 등 신규 피지컬AI 실증·보급(208억원)

공동영농 패키지 지원		
① 농지 집적화	② 경영지원	③ 전문인력
· 전수조사에 따른 신규 처분명령 매입농지(2,850ha) 우선 공급	· 시설·장비·로봇 보급(6→36개) · 신규 저금리 자금(최대 25억원)	· 영농법인 취·창업과 연계한 신규 청년예비농 1,150명 육성

- (유통·수급) 온라인거래 활성화, 신규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 유통구조 혁신
 - (신규 공공유통) 민관합동의 공공형 물류센터·유통법인 설립(110억원, 총 1,800억원)
 - (온라인) 맞춤형 바우처 확대(2,000→3,300개, 수산추가) 및 거래·정산자금 지원(0.1→0.2조원)
 - (소비) 신규 알뜰소비앱 구축(11억원)으로 소비자에 실시간 장바구니 물가정보 제공
- 드론·위성을 활용한 관측 고도화, 주요품목 면적·출하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(+548억원) 및 가격안정제 도입(2개 품목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	2,341	11,658	· 대상지역 확대(17→35개), 보조율 상향
-공익기능증진직불	29,703	30,615	· 밭 면적직불금 약 +25% 인상
-농어촌상생협력기금	-	2,000	· '30년까지 조성목표 부족분(0.7조) 지원

[취약노동자] ‘권리보호 확대 및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’ 01→02조원

- (노동안전망) 노무제공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
 - 사회보험료 지원범위를 고용·국민연금에서 산재·건보까지 확대
- (분쟁해결) 취약노동자 교육·법률구조, 미수금 회수 지원 확대(500→1,000건)
 - (직업훈련) 신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·자영업자 특화 직업훈련 신설(1,000명)
 - (노동안전) 일터개선 지원(30→60개소), 맞춤형 안전보건활동 직종확대(15→19종)
- (외국인노동자) 신규 외국인 인권 리더 신설(250명),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대(19→26개소), 신규 외국인 산재예방 지원* 강화
 - * 신규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20만명, 신규 외국인 산재예방 특화 교육과정 개발 10억원
- (공공부문) 비정규직 노동자에 적정임금(최저임금의 118%) 및 공정수당 지급(+730억원)으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을 뒷받침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(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)	205	383	· 산재보험료, 건강보험료 20% 신규 지원
- 취약노동자지원	83	144	· 미수금 회수 지원 확대(500→1,000건) · 특화 직업훈련 신설(1,000명)
-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	138	159	· 외국인 인권 리더 신설(250명) ·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대(19→26개소)

[중·저신용자] “K-민생지킴대출 신규 공급” 0.5→0.8조원

- (신용빌드업) 중·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‘신규 K-민생지킴대출’ 0.6조원 신규 공급(재정 0.3조원)
 - * (대상) 신용하위 50%, (한도) 100만원, (금리) 4.5%, (만기) 10년(중도상환 가능)
- (햇살론)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 규모 확대(2.3→2.5조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K-민생지킴대출	-	3,000	· 공급규모 0.6조원(재정 0.3+민간 0.3)
- 햇살론 특례·유스	4,797	5,274	· 햇살론 특례 2.5조원, 유스 0.3조원 공급

【취약계층】 “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소득지원” 54.0→62.2조원

- (기초생보)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.7% 인상하고, 4대급여 대폭 확대(22.4→27.1조원)

* 생계급여액(4인가구 기준): ('26) 月 208 → ('27안) 月 222만원

-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27.7~)

- (노인일자리) 노인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

- 통합돌봄 연계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(20.7→22.5만개)

- (장애인연금) 지급대상을 3급단일 장애인*까지 확대('27.7~)

* 1급~3급중복 장애인 대비 연금액: (기초급여) 50%(18만원), (부가급여) 75%(2.3~6.8만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노인일자리	23,599	24,861	· 노인일자리 115.2→118만개
- 장애인연금	9,071	11,194	· 지원대상 34.5→61.2만명(+26.7만명)

【돌봄】 “지역·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보완” 5.0→5.6조원

- (통합돌봄) 본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·군·구 지역특화 서비스 지원을 최대 10→16억원으로 인상(914→1,558억원)

- 인구감소지역(89개) 중 30개 지역에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신설(61억원)

- (장애인) 장애인활동지원(14→14.9만명) 및 발달장애인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(2.7→3.3만명)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돌봄 확충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발달장애인 돌봄지원	4,565	5,721	·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(+6,500명) 등
- 장애인활동지원	28,164	31,508	· 대상 확대(+9천명), 바우처 단가(+4%)

【사회안전메트】 “위기가구 발굴 및 자살예방 강화” 0.5→0.6조원

- (위기가구)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·선제적 지원 강화
 - 위기징후 포착시 위기가구에 **신규** 긴급생계지원 30만원 선지급 (53억원), 위기가구 방문시 **신규** 생필품꾸러미(2.5만원) 지원(7.5억원)
 - 전국 모든 지역 **그냥드림센터**(300개소) 설치·운영 뒷받침(73→89억원)
- (자살예방)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에서 일상회복까지 쉼주기적 관리·지원 강화(736→947억원)
 - (사전예방) **신규** AI기반 24시간 자살유발정보 온라인(SNS 등) 모니터링 체계 구축(10억원)
 - (출동·치료) **신규** 국가자살대응상황실 설치(10억원) 및 자살대응 전담인력 확충(0.1→0.2만명)
 - (일상회복) 자살시도자, 유가족 등 일상복귀를 위해 치료비 지원인원 확대(0.2→0.4만명)

4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0.1→0.3조원

- (성장) **신규** 우수 창업모델(500팀) 발굴 및 **신규** 협업패키지 기획·사업화 (180건), **신규** AI 전환(1,000개사) 지원 등 사회연대조직 성장 뒷받침
 - **신규** 사회연대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**전담기관 신규 출연**(400억원), **신규** 이차보전 방식의 협동조합 전용 저리융자 공급(0.4조원)
- (인재)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(2.5→4천명), **신규** 청년 리더(300명) 및 **신규** 지역 전문인재 양성(약 500명) 등 인재 육성 지원
- (인프라) **신규** 사회연대경제정책 연구센터 설치, **신규** 통합 플랫폼 구축 (단위: 억원)

구분	'26년	'27안	비고
- 성장·경쟁력 지원	640	1,965	· 신규 창업모델 발굴, 신규 AI 전환 지원, 신규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 등
- 인재 육성	623	968	·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, 청년 리더 양성, 지역 전문 인재 양성 등
- 인프라 조성	23	142	· 사회연대경제정책 연구센터 설치, 통합 플랫폼 구축, 기본계획 수립 등

【 주택공급 관련 재정 투자방향 】

□ '30년까지 국정과제 공적주택 110만호+α 공급 차질없이 이행

○ 공적주택 예산 '26년 21.2조원 → '27년 30.0조원(+8.8조원),

• 공급규모	19.4만호	21.8만호(+2.4만호)
• 청 년	7.1만호	10.6만호(+3.5만호)

※ 주택부문 전체 예산 38.4 → 44.0조원(+5.6조원, +14.5%)

□ 8.13대책 등에 따른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정 적극 뒷받침

과제	'27년 지원 내용
① 보편형 임대주택	√ 역세권, 중형 평수 등 고품질 장기임대주택 제공 ⇒ 총 6.2조원 신규 지원, 3.6만호 공급
②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신설 (※ 기존 : 쉼 개발사업장 지원)	√ 자금난 주거사업장 대상 저금리 대출 전용리츠 신설 ⇒ 재정 1천억원 출자, 총 4천억원 규모 조성
③ 주거시설 PF 이차보전 신설	√ '27년 내 착공 사업장에 대출금리 1%p 이차보전 ⇒ 1,696억원 재정 지원, 약 11만호 금융부담 완화
④ 캠프 PF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	√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상 민관합동 펀드 조성 ⇒ 재정 0.5조원 출자 등 총 3조원 조성('27~29년)
⑤ 모듈러주택 출자 신설 (※ 기존 : 추가 용자만 지원)	√ 공기단축이 가능한 모듈러공법 적용 임대주택 출자 ⇒ 재정 280억원 신규 출자, 年 약 5천호 지원

['27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6년	'27안
지방주도 성장	성장엔진특별보조금	—	0.7조원
	지역필수의료지원	0.8조원	1.3조원
	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	—	0.2조원(30개교)
	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	—	1.5조원(90개소)
민생안정	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연체 특별채무 조정	—	0.7조원
	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	—	월 50만원, 3개월
	농어촌 기본소득	0.2조원, 17개군	1.2조원, 35개군
	K-민생지킴대출	—	0.6조원 (1인 100만원)
적극복지	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	22.4조원	27.1조원 *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.7% 인상
	통합돌봄	시군구 최대지원 10억원	시군구 최대지원 16억원 취약자돌봄센터 30개소
	위기가구 발굴·지원	—	생필품꾸러미 10만가구 긴급생계지원 30만원
사회연대 경제	협동조합 지원	—	창업모델 500개사 용자 4천억원
	청년 일경험	2.5천명	4천명

5

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

①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자주국방 실현

26.2→30.0조원

【핵심전력】 “자주국방 핵심전력 도입”

18.6→21.3조원

○ 임기내 차질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 장비 및 무기체계 확보

- 특전사 침투물자 24종(고공침투 13종, 수중침투 11종) 확보(98→1,348억원)
- 천무(다연장로켓) 장착 탄종인 230mm급 무유도탄 필수물량 확보(1,803→5,504억원) 등

○ 핵추진잠수함·KF-21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도입

- 신규 핵추진잠수함(0.1조원, '30년대 중반 진수), KF-21 양산(1.4→3.3조원)

【군구조 개편】 “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” 0.1→0.3조원

○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 확대를 위해 초급 간부 총보수를 월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, 적금 신설과 함께 단기복무 장려금도 대폭 인상

- 초급간부 연봉(하사 1호봉) 36백만원(월3백만원) 달성을 위해 처우개선을 5.9% 인상
-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 단가 인상(1,000→1,200만원, 532→1,152억원)
- 신규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적금 지원(최대 월30만원, 36개월) 신설(189억원)

○ 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응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상비 예비군 확대(3,700→7,000명) 및 과학화 훈련 인프라 확충

- 상비예비군 확대(87→256억원), 훈련보상비 인상(688→903억원)
- 신규 과학화 동원훈련장('27~'31, 총 836억원)(4억원) 및 신규 훈련기간 의무차량(7억원)

○ 현역 장병은 군 본연의 훈련·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·제설·시설관리 등 비전투임무는 민간위탁 적극 활용

- 신규 GOP대대 부대종합관리(9억원) / 신규 민통초소(6개, 18억원) 및 신규 주둔지 경계 시범사업(7억원)

【최첨단 무기】 “사로봇·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” 08→1.2조원

- 전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AI·로봇 등을 활용한 지능형 경계체계 전환 및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 투자 확대
 -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(51→500억원), 중요시설경계시스템(50→92억원)
 - 폭발물 탐지·제거 로봇(1,132→1,699억원), 자율기뢰탐색체(1→78억원)
- 국방 환경에 최적화된 D.AX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, 군별 자체 역량 강화를 토대로 군 특화 AI 모델 개발·고도화
 - 신규 수송·주둔지·경계 피지컬AI 실증을 위한 D.AX 프로젝트 추진(430억원)
 - AI 경계체계^{육군}, AI 지휘통제^{해군}, AI 항공작전 체계^{공군} 등 신규 군별 AI 고도화(70억원)
- 현대전 양상에 대비한 드론 전력 대폭 확대 및 촘촘한 對드론 방어망 구축
 - (드론) 교육훈련(358→882억원), 타격(148→479억원)
 - (對드론) 교육훈련·작전지원(3→393억원), 탐지(503→756억원), 교란·요격(430→916억원)

【보훈】 “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유공자 예우 강화” 6.7→7.2조원

- (보훈급여) 보훈보상금 5%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등 +5만원 인상
 -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보상수준을 추가 인상(기본 5% → 본인 10%, 유족 8%)하고 지원범위도 확대
 - (참전명예수당) 月 49만원→54만원, (무공영예수당) 月 55~57만원 → 60~62만원
 - (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 확대, 최소 2代 보상) +2,500명, +585억원
- (의료지원) 보훈·위탁병원 진료비 대폭 확대하여 맞춤형 의료지원 강화, 신규 준보훈병원 운영('27~) 및 조기정착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
 - (보훈병원) 4,505→5,683억원(+26.1%), (위탁병원) 2,695→3,365억원(+24.9%)
 - 신규 (준보훈병원(강원,제주)) 의료기기 및 전산개발비 지원(94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보훈급여군 사업	52,398	55,615	· 보상금(+5%) 및 수당(+5만원) 단가인상 · 독립 보상금 추가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
- 보훈·위탁병원 진료	7,200	9,048	· 진료비 대폭 인상(+1,848억원, 25.7%) · 준보훈병원 조기정착 지원(94억원)

【재난예방】 “호우·화재 대응 첨단화 및 녹조 집중관리” 25→3.2조원

- 기후위기에 대응,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**호우예방 인프라** 확충(1.1→1.3조원), **신규** 무인소방로봇(49대)·해안순찰 드론(22대) 등 **첨단 장비** 도입
- 현 정부 내 「녹조-Zero」를 목표로 주요 수계별 오염원 집중관리 및 수질개선 전폭 지원(272→2,03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재해위험지역정비	10,630	11,530	·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지구 54개소
- 첨단기술 활용 예측·대응	505	1,054	· 무인소방로봇(49대), 산림헬기(2대) · 해안순찰드론(22대), 구조동력보트(33대)
- 해양안전 역량강화	-	732	· 서해전력 3척, 단속전담함정 2척 등
- 녹조대책 사업군	272	2,030	· 낙동강·도암호·소양호 등 수질개선사업 반영

【안심일터】 “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”

0.4→0.6조원

- **(안전한 일터)** **신규** 화재·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(401억원) 도입, 소규모 사업장 고위험 개선(300억원) 및 현장점검·컨설팅 확대(155억원)
- **(건강 인프라)**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(1,245억원), **신규** 산재근로자 선보장제도를 도입(436억원)하고 직장복귀 지원 확대

- **(안전한일터)** 안전일터(1,607→1,768억원), 건강일터(408→498억원), **신규** 종합컨설팅(52억원)
- **(건강인프라)** 특수검진비용(320→418억원), **신규** 선보장(436억원), **신규** 타직장복귀지원금(54억원)

【마약대응】 “전주기 마약 대응체계 구축”

0.11→0.13조원

- **(예방·차단)** 청소년 등 대상별 **예방 교육·홍보**를 **강화**하여 마약 오남용 사전 예방, 밀수 **신고포상금 확대**를 통한 마약 해외유입 차단
- **(치료·재활)** **중독자 치료·재활** 인프라 확충 및 사후관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마약범죄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

- **(예방·차단)**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·교육강화(118→130억원), 밀수 신고포상금(8→175억원)
- **(치료·재활)** 마약사범 치료·재활 강화(38→44억원),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(97→134억원)

【ODA】 “전략적 ODA 등을 통한 K-이니셔티브 확산” 0.7→1.3조원

- AI·문화·테크 등 강점 분야의 전략형 프로젝트 확대(198건, 0.9조원)를 통해 **K-이니셔티브** 확산 및 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(0.6→0.9조원)
- 우크라이나·인도·베트남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하고, 공급망 확보 등 연계사업 발굴·지원(0.2→0.4조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K-이니셔티브 확산	5,794	8,781	· K-AI (54건, 823 → 1,000억원) · K-CULTURE (30건, 419 → 621억원) · K-TECH (114건, 4,552 → 7,160억원)
-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	1,380	3,486	·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, 인도 조선 협력 등 (64건, 816 → 2,660억원) · 정상회담 후속사업화 지원 (564 → 826억원)
- 공급망 확보	303	705	· 공급망·산업인프라 구축 (6건, 188 → 517억원) · 핵심광물·자원 확보 (7건, 115 → 189억원)

【외교역량】 “재외공관 거점화로 기업 해외진출 지원” 0.1→0.2조원

- 분야별 거점공관을 우리 기업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문화·AI 등 전략사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(778→1,177억원)
- 재외국민 보호·안전망 강화를 통해 해외 위난 및 사건·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(454→50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- 글로벌 협력 및 재외공관 역할 강화	778	1,177	· 거점공관 지정·운영 : 신규 우수문화(10개), AI(12개), 수출(12개), 과학기술(36개) 등 · 신규 K-이니셔티브 협의체, 글로벌 AI 의제 선도 등
- 재외국민 보호 강화	454	500	· 재외국민보호(140 → 151억원) · 신규 재외공관 보강(27억원)

【원유·핵심광물】 “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원유·핵심광물 확보” 04→21조원

- (원유) 석유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**신규비축시설 확충**(+2천만배럴, 568억원) 및 **비축물량 확대**(+2백만배럴, +0.2조원)
 - 중동 外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**신규정제설비 고도화 투자** 지원 및 **신규공정 기술개발 사업** 신설(460억원)
- (핵심광물)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**희토류등핵심광물 확보**(934억원) 및 **재자원화**(’30년까지 20% 목표) **설비투자 적극 지원**(106억원)
- (투자기반)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핵심 자원안보 분야 투자하는 **신규「자원안보기금」** 신설(1.4조원)

【현지투자】 “해외 공급망 투자 강화”

0.01→0.2조원

- (현지투자)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현지 지분확보, 해외 신규법인 설립(단독·합작) 등 **신규해외 공급망 투자 강화**(0.2조원)
 - 국내 생산 원가 경쟁력이 없거나, 규제 등으로 국내 생산이 곤란한 핵심품목 대상 해외 생산역량 구축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 활용

【북극항로】 “시범운항 실시와 연관산업 육성”

0.1→0.2조원

- (항로개척)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**시범운항** 실시 및 **친환경 선박**(11척), **쇄·내빙선**(2척) **건조** 지원
- (산업육성) 정책·기술·인력·해외진출 등 **연관산업 생태계 조성**

- (육성 전략)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, 북극항로 개발 계획, 기술로드맵 마련 등
- (기술 실증) 극지 해양 환경 시험, 극지 수중 모빌리티 등 2개 과제 실증
- (인력 양성) 극지 해기사 1천명 육성, 해사·국제상사법 등 특성화 교육 시행(2개 대학)
- (해외 진출) 선박 기자재 업체 40개사 해외진출 지원

(단위: 억원)

	’26년	’27안	비고
- 석유비축사업 출자	553	3,287	· 비축시설 확충(2천만배럴) 및 비축 확대
- 공급망안정화프로그램	100	2,000	· 현지 지분확보, 해외 신규법인 설립 등

['27년 달라지는 모습]

분 야	주요 사업	'26년	'27안
자주국방	핵추진잠수함	－	0.1조원
	KF-21 양산	1.4조원	3.3조원
	단기복무부사관 적금지원	－	월 최대 30만원, 36개월
	참전명예수당	월 49만원	월 54만원
안전하고 특권없는 사회	풍수해정비 등 호우예방 인프라	1.1조원	1.3조원
	녹조 개선	272억원	2,030억원
	서해 경비·단속 전력 증강	－	중·대형함정 5척
	화재폭발 취약사업장 지원	－	401억원
실용외교	K-이니셔티브 확산	0.6조원	0.9조원
	정상외교 성과극대화	0.1조원	0.3조원
공급망 안정화	자원안보기금 신설	－	1.4조원
	해외 공급망 투자	－	0.2조원
	북극항로 개척	－	시범운항 2회

1. 보건 · 복지 · 고용 분야
2. 교육 분야
3.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4. 환경 분야
5. R&D 분야
6. 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 분야
7. SOC 분야
8. 농림 · 수산 · 식품 분야
9. 국방 분야
10. 외교 · 통일 분야
11.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12. 일반 · 지방행정 분야

- ◇ 양극화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
- ◇ 출산율 반등 지속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
- ◇ 5극3특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

□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·자립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

- 기준중위소득 **역대 최대 인상**(+6.7%)으로 최대 급여액을 222만원 (月 208→222만원, 4인)으로 상향, **자활사업 대상 확대**(7.2→7.5만명)
- **신규**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만원 先지급(53억원) 및 **신규** 국가자살 대응상황실(10억원) 설치 등 자살·위기가구 발굴·대응 능력 제고
- **한부모가정 양육비** 지원기준 완화(중위 65→66%) 및 **가족돌봄·고립은둔 청년** 대상 **신규** 일상·관계회복프로그램(0.6만명) 제공

□ 장애인 소득·돌봄 지원 강화 및 자립 기반 확충

-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단일 장애인*까지 확대(0.9→1.1조원),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**폐지**(’27.7~)
 - * 1급~3급중복 장애인 대비 연금액: (기초급여) 50%(18만원), (부가급여) 75%(2.3~6.8만원)
- 장애인**활동지원**(14→14.9만명), 발달장애인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(2.7→3.3만명) 등 돌봄 확충, **장애인 일자리** 확대(3.58→3.84만개)

□ 출산율 반등 지속을 위해 혼인·출산·양육 3종 패키지 등 지원

- **신규** 혼인신고 부부에게 **혼인지원금 100만원** 지원 (생애 1회, ’27.1~)
- **신규** 최대 2천만원*의 **아이맞이(출산)지원금** 지원(1년간 4회 분할지급, ’27.7~)
 - * (기본) 첫째 1,000, 둘째 1,200, 셋째이상 1,500만원 (지방우대) 첫째 1,500, 둘째 1,700 셋째이상 2,000만원
- 기존 아동수당 대비 2~3배의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고, 0~1세는 가정양육시 月 30만원 추가 지급 (’27.7~)
 - * (현행) 月 10~13만원 → (개편) 기본 月 20만원 / 지방우대 月 30만원

-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저소득노인 소득지원, 지역돌봄 등 투자 강화
 -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신설(61억원)을 통해 지역돌봄 공백 완화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(914→1,558억원)
-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
 - 지방정부가 지역 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·추진하는 **신규**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* 신설(3,600억원)
 - * (중앙) 표준 사업유형 제시 → (지방) 시도별 재원 내 자율적 사업 추진
 -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핵심 진료시설 확충
 - * 국립대병원별 특화분야 선정 → 첨단 시설·장비 구축, 인력 확보 등 지원(1,188억원)
 - 지역의료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^{계약형}지역필수의사,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을 확대*하고, **신규**지역의사제 학자금·주거비 지원도 신설
 - * 지역필수의사 136명(6개 시도) → 448명(전국확대), 시니어의사 160명 → 220명
 - AI 기반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'**신규**공공의료 AI 플랫폼' 구축(71억원) 및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**신규**AI 활용 바우처 지원(4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기초생활보장	239,868	287,510	· 생계급여(91,727→108,004), 의료급여(98,400→122,973)
■ 취약계층지원	65,063	72,839	· 장애인활동지원(28,164→31,508)
■ 공적연금	922,824	986,370	· 국민연금급여지급(545,085→594,767)
■ 보훈	67,747	73,220	· 보상금(37,175→39,764), 보훈병원진료(4,505→5,683)
■ 주택	383,986	439,755	· 신규 보편형 건설임대주택(47,719)
■ 사회복지일반	12,170	13,767	·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(1,793→1,829)
■ 아동·보육	61,164	68,325	· 신규 아이맞이(출산)지원금지원(6,981)
■ 노인	290,922	318,450	· 기초연금(231,141→256,530)
■ 성평등가족청소년	19,673	20,800	·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(5,745→5,964)
■ 고용	249,703	257,458	· 모성보호육아지원(40,728→42,710)
■ 노동	118,990	123,185	· 산재보험급여(81,463→86,246)
■ 고용노동일반	8,261	8,976	·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(96→105)
■ 보건의료	52,213	55,986	· 신규 지역주도의료공백해소지원(3,600)
■ 건강보험	143,241	154,662	· 건강보험가입자 지원(127,171→138,039)
■ 식품의약품안전	8,348	8,919	· 마약류안전관리강화(97→119)
합 계	2,644,172	2,890,223	전년대비 +9.3%

〈참고〉 일자리 분야

◇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·적응과 첨단산업 중심의 직업훈련 전환을 촉진하고, 일·가정 양립 및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

- 청년 노동시장 진입·적응을 위해 취업준비·훈련·일경험 등 전방위 지원
 -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한 청년 특화 **신규** 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 분리·신설하고 지원 강화(0.4조원, 16만명)
 - * 구직촉진수당 60→65만원 인상, 직무진단·진로상담 등 첫 취업 특화 지원
 -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*하고, **신규** 대학생 인턴 학기, 국내외 인턴 등 일경험을 대폭 확대하여 초기 경력 형성 지원
 - * **신규** 대기업 주도 K-청년뉴딜아카데미 5만명, K-Digital Training AI 특화과정 확대(1→2만명), **신규** 대학생 전공 연계 인턴학기 지원(청년 첫경력 프로젝트) 6만명 등
 - 청년의 정규직 채용·근속·소득보전을 동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규모(10.5→13만명) 및 인센티브* 대폭 확대
 - * 연 최대 360→900만원 + 수도권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
-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재구조화
 - 중소기업 AI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, 중소기업 컨설팅에 참여하는 청년 AI 인재 대상 활동수당 신설
 - *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(10→15개소), S-OJT 훈련기업(600→1,050개소)
신규 중소기업 청년 AI 코치(300명, 22억원)
 -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을 위해 첨단산업 훈련비 자부담 면제 신설, 반도체·피지컬AI 분야 직업계고 훈련 지원 학과 확대(+35개)
 - * 내일배움카드 KDT 첨단산업 12개 분야(반도체, 로봇 등) 훈련비 자부담 면제

□ 모성보호·육아지원, 근로시간 다변화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

- 출산율 증가에 대응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확대*, **신규** 저소득층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프리미엄** 신설

* 출산전후휴가급여 전년대비 예산 규모 +19%, 배우자출산휴가급여 +67%

** 저소득 근로자의 마지막 1개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

-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 등 대상 육아수당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

* **신규**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(월 50만원, 3개월)

- 워라벨 개선을 위한 주4.5일제 도입 사업장 지원 확대(220→310개), 임신기·다자녀 근로자 우대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(0.7→1.1만명)

□ 노무제공자, 외국인, 노인·장애인 등 취약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강화

- 노무제공자에 대한 **신규** 산재·건강보험료(보험료의 20%) 지원, 미수금 회수, 일터개선 등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(757→1,092억원)

*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(現고용·국민연금→**신규** 산재·건보 추가), 미수금 회수 지원 확대(500→1,000건), 특화 직업훈련 신설(1,000명), 일터개선 지원 확대(30→60개소) 등

- **신규** 외국인노동자 인권 리더(250명) 및 **신규** 외국인 산재예방 교육* 신설,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확대(19→26개소)

* 기초안전보건교육 20만명, 산재예방 특화 교육과정 개발(10억원) 등

- 노인일자리 확대(115.2→118만명), 장애인 근로 지원 강화* 등 취약계층 소득 보장 등을 위한 일자리 접근성·품질 제고

* 인원 확대(11.7→12.2천명, +500명) 및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직접일자리	39,854	42,466	· 노인일자리(115.2→118만명)
■ 직업훈련	22,548	27,505	· K-청년뉴딜아카데미(4,895억원, 신설)
■ 고용서비스	19,117	20,150	· 신규 청년첫취업지원제도(16만명, 구축수당 60→65만원)
■ 고용장려금	59,164	61,442	· 출산전후휴가급여(7.6→8.7만명, 3,792→4,516억원)
■ 창업지원	30,143	34,010	·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(2,000→4,000억원)
■ 실업소득 유지·지원	140,504	138,865	· 구직급여(11.5→11.7조원), 조기재취업수당(5,852→4,642억원)
■ 지원고용 및 재활	11,686	12,619	· 장애인 고용관리지원(11.7→12.2천명, 2,753→3,509억원)
합 계	323,016	337,059	전년대비 +4.3%

- ◇ 초·중등교육의 안정적 투자기반을 유지하면서 영유아·고등·평생교육 투자도 균형있게 확대
- ◇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AI·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·청년의 성장기회 확대
- ◇ 영유아부터 고등·평생교육까지 전국민 생애주기별 교육기회를 한층 보강

□ (총괄) '27년 교육분야 투자를 99.9→110.7조원(+10.8%)으로 확대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.7→78.9조원(+10.1%)으로 확대하여, 초·중등교육의 안정적인 투자기반 유지
 - 산정방식은 기존의 내국세 연동률을 폐지하고,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
- 교부금外 투자는 28.3→31.9조원(+12.8%)으로 교부금보다 높은 증가율로 확대하여 고등교육·영유아·평생교육을 균형있게 보강

□ (지역)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·교육·연구 종합 지원

- 지방국립대 **신규** 전액장학금(0.2조원)을 신설하고,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(800→1,150억원)하여, 특성화 사립대 우수학생 1만명 신규 지원
- 지방국립대 21개교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석학 유치·첨단 연구 등에 투자하도록 **신규** 미래인재성장자금 0.7조원 신설

* 거점국립대 9개교 평균 500억원, 일반 지방국립대 12개교 평균 200억원 등

-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**신규** 사립대 이공계 교육·연구 인프라 6,000억원(40개교 × 150억원) 지원*

* 사립대에 첨단 연구·실험장비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, 기업·대학이 공동 활용하여 전략산업 인재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

-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대학 패키지 지원 700→800억원으로 확대

- (첨단교육) AI·첨단 교육부터 경력 제공까지 실무 인재양성 강화
 - 대학생과 미취업·비재학 청년의 첨단분야 집중교육 지원을 위한 부트캠프 지원인원 2배 수준 확대(1.3→2.5만명)
 - 기업·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산업현장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**신규**문제해결 프로젝트(1,400억원, 2만명 이상) 도입
 - 대학생 AI 기본교육을 2배 이상 확대(88→202억원)하고, 대학생이 최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신규**AI 공동구독(200억원) 지원
 - 취업 전에 직무경험을 쌓도록 **신규**대학생 인턴학기(0.5조원)를 도입하여 전문대·일반대 6만명에게 유급 일경험 제공
- (연구보강) 석·박사와 대학 연구자 등의 안정적 기반 제공
 - 석·박사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BK21을 확대(0.5→0.6조원)하여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교육·연구 지원 기반 강화
 - 과제단위 지원을 넘어 연구자가 장기적인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**신규**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 지원사업(300억원) 신설
- (영유아) 영유아 투자 확대로 무상교육·보육 완성과 서비스 질 개선
 - 0~2세 보육료 단가를 3% 인상하고 출생아 증가 반영
 - 3~5세 무상교육·보육 완성,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등 서비스 질 제고
- (평생) 청년·재직자·지역주민 AI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투자 확대
 - **신규**AI 재도약대학(0.2조원) 신설하여, 청년·재직자 AI 역량 강화
 - **신규**지역 평생교육 활성화(235억원) 사업과 **신규**청년 전용 평생교육 이용권(95억원)을 도입하여 지역·청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영유아·초중등교육	821,165	897,354	교부금 개편 및 전년대비 10.1% 증액
■ 고등교육	162,965	193,014	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, 미래인재성장자금,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, 사립대 이공계인프라 지원 등 신설
■ 평생·직업교육	13,427	15,206	AI재도약 대학,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신규 반영
■ 교육일반	1,677	1,803	경상적 경비 지출 경감 등 불요불급한 지출절감
합 계	999,233	1,107,378	전년대비 +10.8%
교부금 제외 합계	282,546	318,660	전년대비 +12.8%

- ◇ 기초예술 지원강화 및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
- ◇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을 살리는 메가관광권 전략적 투자
- ◇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여 문화 예술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
- ◇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

□ 정책금융 및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등 K-컬처산업 기반 조성
프리랜서 기초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등 기초예술 지원 강화

- 정책금융 확대(0.5 → 0.7조원)로 콘텐츠 투자 마중물을 확보하여 글로벌 콘텐츠 창출, 신규 콘텐츠 기업성장 지원(100억) 신설
- 프리랜서 예술인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(311억)과 지역 예술 활성화(215억), 장르별 지원* 등으로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 지원
- * 공연장과 연계한 장기공연 연극 개발, 고전 및 근현대 문학작품 공공번역 등
- 콘텐츠 글로벌 IP 창출과 해외 신시장 개척¹⁾, 인디음악·게임 등 유망 콘텐츠 맞춤형 성장 지원²⁾, 및 영화 창·제작 지원 등 투자 활성화³⁾

1) 신규 글로벌 프론티어 게임 제작 지원(60억원), 영화 국제협력지원(6→17편)

2) 신규 인디음악(허브 조성 등 160억원), 인디게임(130→200개)

3) 영화지원예산(1,332→1,726억원), 독립영화(60→79편), 중예산영화(18→22편)

□ 방한 관광객 지방여행 유도, 국민여행 및 지방관광 투자 확대
지방관광 전성시대를 여는 K-관광 활성화 추진

- 지방공항 중심 5대 메가관광권 조성으로 여정별 관광 재설계(659억원), 민간 주도의 패노메논 연계 K-컬처 확산으로 방한관광객 유치
- 국민 지방여행 확대 및 지방 숙박시설 확충(관광숙박 전환 컨설팅 2,000개, 신축 3개소)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

* 노동자 휴가지원(10만명→21만명), 지역사랑휴가제(20만명→40만명)

□ **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및 우수한 공연·전시의 지방 확산 등을 통해 국민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 격차 해소**

- 모든 청년 대상으로 **청년문화예술패스** 대상을 넓히고, 국립예술단체 등의 우수 공연·전시 **지방순회 확대**(782 → 931회)

* ('26년) 19 ~ 20세 → ('27년) 19 ~ 34세(청년기본법상 청년 대상)

□ **국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, 전문 체육인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접근성 강화**

- 노후화된 **공공체육시설 개보수***를 대폭 확대(953→2,558억원)하고 **유·청소년 체육활동** 지원을 강화(10→36개 종목)

* 여름·겨울 등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실외 체육시설 지붕(그늘막) 설치, 지방 K-pop 공연 가능하도록 월드컵 경기장 개선 등

-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의 **노후시설 개보수**(67억), **신규CT 도입**(20억), **신규경기력 분석 시스템 신규 구축**(15억)을 통해 경기력 향상 지원
- **신규유·청소년 장애인 프로그램** 조성(800개), 이천선수촌 다목적 숙소 및 노후시설 대폭 개선으로 **장애인 체육기반 확충**

□ **국가유산 보존·관리를 지속 강화하고, 국가유산 체험 및 향유 확대로 K-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**

- 국가유산 보수정비(+206억원),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(+37억원)
- **신규**체류형 국가유산스테이(시범, 10개소), **신규**국가유적지 활용 휴식 프로젝트(5개소), 궁능원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(+54억원) 등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문화예술	45,634	59,372	· 정책투자펀드 확대 조성(4,300→6,030) ·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확대(361→7,925)
■ 체육	16,987	18,333	·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(953→2,558) ·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(55→424)
■ 관광	14,804	17,580	· 신규 메가 관광권 조성(659) · 노동자 휴가지원(107→220)
■ 국가유산	14,971	16,645	· 신규 국가유산 지역활성화(71)
■ 문화·관광 일반	4,024	4,167	·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(59→72)
합계	96,420	116,099	전년대비 +20.4%

- ◇ 전기차 물량 대폭 확대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
- ◇ 녹색금융,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보조 등 탈탄소 전환 지원
- ◇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피해 배상 등 환경 안전 강화

□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가속화 전폭 지원

- 그간 축소해왔던 승용전기차 구매보조금 300만원 유지, 물량은 역대 최대 편성(37만대), 전체 보조금 예산* 대폭 확대(2.3→3.0조원)

* 무공해차 보급지원: ('25) 2.3조원 / 32만대, ('26) 2.3조원 / 30만대, ('27) 3.0조원 / 43만대

- 전기차 개소세 단계적 축소 등 조세지출 재정전환*에 따라 맞춤형 재정지원(구매보조금) 방식으로 개편

* 전기승용차 개소세 '27년 감면 규모(0.1조원)보다 많은 전기승용 보조금 0.3조원 증액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분(0.3조원)에 대한 재정지출 0.3조원 반영

□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,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보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적극 지원

- 온실가스 감축 기여, 환경기술 사업화 등 녹색 기업에 융자·보증·펀드 등 녹색금융 공급 확대(5,962→7,447억원)

* (펀드)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(532→1,330억원), (보증) 녹색경제 전환 및 금융지원(3,265→3,838억원), (융자) 탄소감축 녹색금융지원(2,165→2,279억원)

- 신규저GWP(지구온난화지수) 냉매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냉매 냉동기기 대상 친환경냉매 도입 지원(200억원)

-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 요구가 증대(EU 등)됨에 따라 중소 수출 부품사 대상 지원 확대(12→191억원)

-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및 탈플라스틱 기반 확대 등 순환경제 활성화
 - **신규** 희토류 영구자석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자동 해체 및 전처리 장비 지원(80억원)
 - **신규** 플라스틱 선별률 제고 및 처리량 확대를 위한 광학선별기 도입 지원 등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기반 구축(61억원)
- 빈번한 수해로부터 국민 보호,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, 환경피해·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완수 등 국민 환경 안전 강화
 - 강남역, 광화문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예산 확대(199→555억원)
 - 임기 내 녹조 Zero 달성을 위해, 국가가 주도하여 주요 수계별 오염원 집중관리 및 수질개선 전폭지원(272→2,030억원)
 -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배상 이행(2,447억원)
 - 국가 소유로 전환('26)된 사육곰 보호를 위해 **신규** 월악산 사육곰 보호 자연학습장 조성(90억원) 및 임시보호 비용 지원 확대(15→47억원)
 - **신규** 국립공원 내 하천·계곡 불법점유시설(북한산 수유지구) 정비(21억원), 국립공원 실물스탬프, 스탬프여권 제작 등 스탬프트어 확대(2→15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자원순환·환경경제	17,747	19,360	• 신규 이차전지 및 핵심광물 순환이용 기반 구축(121) •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(531→1,330)
■ 기후대기·환경안전	43,289	49,414	• 무공해차 보급사업(22,845→30,090) •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(220→2,634)
■ 물환경	58,007	56,530	• 국가주도 수질개선 사업군(272→2,030)
■ 자연환경	9,156	8,981	•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(15→47)
■ 환경일반	6,339	6,411	• 노후 청·관사시설 개보수(141→318)
■ 해양환경	4,598	5,640	• 연안정비(1,147→1,200)
합 계	139,136	146,337	전년대비 +5.2%

- ◇ 미래 성장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술투자 확대
- ◇ 투자형 R&D 신규 도입, 지역 R&D 확대 등 R&D 혁신 추진
- ◇ 출연연 전략연구, 신진연구자 등 연구현장 핵심역량 지원 강화

□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성장을 주도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
NEXT 10대 분야* 전략기술투자 확대(11.0→13.8조원)

* 「국가전략기술육성법」 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10대 핵심 기술분야
(AI, 첨단로봇·모빌리티, 첨단바이오, 양자, 반도체 등) 55개 중점기술

- 2030 달착륙을 위한 우주·항공 분야, 재생의료 등 첨단 바이오
핵심기술, 핵융합·SMR 등 미래 에너지원 등 집중 투자

* 차세대발사체개발(2,916억원), 한국형발사체고도화(1,550억원), 바이오·의료기술
개발(5,113억원), 핵융합핵심기술개발및인프라(1,601억원) 등

□ 제조 공정·보건·의료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견인을 위해 AI
융합 R&D 확산

- AI 기반 산업공정 자율화 전환을 위한 제조 R&D* 및 보건·의료
분야(지역·필수의료, 돌봄, 정신건강 등) AI 모델** 개발 지원

* 신규제조암묵지활용AI솔루션개발(2,900억원), 신규폴스택 AI팩토리 및 제조AI 파운
데이션모델 개발(1,200억원) 등

** 신규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형 의료특화 AI모델개발(30억원), 신규국가 AI 통합돌봄
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(195억원) 등

□ 신규투자형 R&D 도입을 통해 정부 R&D 지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
(투자 → 성과창출 → 재투자) 및 기업의 과감한 도전·성장 지원

-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신기술·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전략적
으로 투자*하고,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를 환류하여 재투자

* (SPC형) 신규화합물반도체R&D상생패(400억원), 신규희귀·난치질환유전자·세포치료제(250억원)
(투자조합형) 신규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(200억원), 신규공공연구성과기반 투자형R&D(243억원)

□ 지역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고 성장동력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산·학·연 기반의 지역형 R&D 투자 확대

○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4극3특 중심의 핵심과학기술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

* 신규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(산업부, 1,400억원),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(과기부, 1,512억원)

□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·역할 강화, 핵심 연구역량 집중 지원을 위해 전략연구사업 대폭 확대(100 → 152개, 0.5 → 0.7조원)

* 신규 희토류 리스크 제로화 기술개발(48억), 신규 과학기술 다학제 AI연구동료 플랫폼 구축(35억)

□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·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지원 확대, 우수연구자의 연구자율성 및 연구몰입 지원 강화

○ 안정적 연구활동을 조성하고,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

* 개인기초연구(2.3→2.4조원), 이공계학술연구기반구축(0.62→0.65조원)

* 인재활용확산지원(854→1,088억원), 국가과학자지원(25→149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 고
■ 과학기술 분야	116,634	141,054	· 개인기초연구(24,421), 집단연구(4,681) · 바이오의료기술개발(5,113)
■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	88,474	97,887	· 소재부품기술개발(12,093) · 투자연계기술개발(13,533)
■ 교육 분야	16,736	17,433	·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(6,469) · 인문사회 기초연구(3,489)
■ 보건·복지 분야	15,571	15,731	· 국가신약개발사업(649) · 연구중심병원육성(550)
■ 교통 및 물류 분야	11,412	11,255	·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(605) ·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(KPS)개발(350)
■ 기타 부문	106,153	111,528	·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(1,054) · 차세대 네트워크(6G) 산업기술개발(709)
합 계	354,978	394,888	전년대비 +11.2%

- ◇ 제조AX 가속화 및 반도체, 피지컬AI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
- ◇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
- ◇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 촉진
- ◇ 핵심자원의 비축·재자원화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
- ◇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창업도전·기업성장 기반 대폭 확충
- ◇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·경쟁력 강화 지원

□ 제조AX 가속화 및 반도체, 피지컬AI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

- 숙련 기술인력 등 고품질 제조 데이터의 수집·축적·검증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R&D 투자를 통한 제조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
 - 신규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(1,158억원), 신규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(R&D, 2,900억원) 및 신규폴스택AI 팩토리(R&D, 1,200억원) 등
- 반도체 성장거점 조기완성 및 AI로봇 개발·보급 확대 투자
 - 신규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(1.5조원), 신규대학·출연연 대상 연구용 휴머노이드 보급(200대, 300억원) 등 로봇 보급 확대

□ 메가프로젝트 전력 적기공급을 위해 전력 인프라 선제적 투자,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집중 지원

- 첨단산업 전력 수요 뒷받침을 위해 송전망·변전소 등 기반시설 투자와 한전 출자(0.5조원)를 통해 전력인프라 투자여력 확보
 - 지중 송전망, 고압 변전소 등 송전망 신규 투자(881억원)
 - * 신규전선로 지중화(27억원), 신규수요유치형 변전소(658억원), 신규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(196억원)
 - 송전단 ESS,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등 계통안정화 투자(6,108억원)
 - * 신규송전단 ESS(5,724억원), 신규전기품질 안정화설비(360억원), 신규가상송전망 기반 ESS(24억원)
-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확대 및 친환경 전기 수요창출 지원
 - 햇빛·바람 소득마을 이차보전, 공장지붕 및 가정형 태양광 등 태양광·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투자 집중 지원(15,108억원)
 - 단독주택, 복지시설 히트펌프 보급을 5배 확대하고(157→635억원), 공동주택, 산업단지 대규모 히트펌프 시범사업 실시(284억원)

-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 촉진
 -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과 성장엔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**신규** 성장엔진 특별보조금(0.7조원) 및 **신규** 대형 R&D 추진(1,400억원)
- 핵심자원의 비축·재자원화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
 - **신규** 원유 비축시설 확충(+2천만배럴) 및 비축 확대(+2백만배럴), 핵심광물 비축(934억원)·재자원화('30년까지 20% 목표) 투자 확대
 - 중동 外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**신규** 정제설비 고도화 투자 지원 및 **신규** 공정 기술개발 사업 신설(460억원)
 -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**신규** 「자원안보기금」 신설
-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창업도전·기업성장 기반 대폭 확충
 - **신규** 모두의 창업·재도전 응원(0.5조원) 프로젝트 본격 추진, **신규** 지역 창업패키지·지역성장펀드(0.5조원) 지원 등 창업도시 지원 강화
 - 점프업 프로그램(595→1,642억원), 중소기업융자(4.4→5.4조원)·모태펀드(0.8→1.3조원)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강화
-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·경쟁력 강화 지원
 - **신규** 산재보험료·건강돌봄 지원(0.2조원) 등 사회안전망 확충, 상생배달앱 활성화(0.1조원), 혁신제품 개발(800억원)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 - 특성·테마별 시장·상권 육성(827억원) 및 전통시장 온누리 할인을 확대(디지털 7→10%), 전통시장 안전 환경 개선(614억원) 등 매출신장 지원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에너지 및 자원개발	52,738	102,834	·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(15,108), 석유비축사업출자(3,287)
■ 산업혁신지원	82,667	111,204	· 서남권 반도체 통합지원(15,000), 5극3특성장엔진보조금(7,000)
■ 무역 및 투자유치	11,591	14,344	· KOTRA지원(3,446), 수출지원기반활용(5,350)
■ 창업 및 벤처	39,512	57,743	· 창업지원지원자금(융자)(16,898), 모태조합출자(13,000)
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	118,916	112,285*	· 소상공인지원(융자)(22,700), 성장기업지원자금(융자)(14,898)
■ 지식재산일반	4,106	4,672	· 특허심사지원(663), 지식재산활용지원(316)
합 계	317,591	411,849	전년대비 +29.7% (이차보전 전환 융자사업 감안 시 34.1%)

* 융자 예산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정책자금 공급규모 순증분 1.4조원은 별도

- ◇ 지역 균형성장,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 확대
- ◇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◇ 대중교통비 절감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, 일터·보금자리 화재 안전까지 촘촘한 민생지원

□ 지역 균형성장,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한 교통·도시 인프라 투자

- 지역 활력을 높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를 조성*하고, 지역의 철도·도로 교통망 준공**을 지원하여 전국 연결성 강화

* 신규산단 용수 공급 등 3,777억원, 신규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175억원 등

** 이천-문경철도, 남일고은-청주상당 국도, 별교-주암3 국도, 함안군북-가야 국도 등

-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,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추진

* (대통령 세종집무실(29입주)) 240→2,057억원, (국회 세종의사당(33준공)) 956→1,191억원

-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기본계획에 착수하고, GTX-B 본격 추진 및 수원발 KTX 준공 지원 등 수도권 핵심 교통망 지원

* (신규5호선 김포연장) 32억원, (GTX-B) 3,095→3,662억원, (수원발KTX) 376→28억원(완료)

□ 자율주행, 도심항공교통 등 실증 확대를 통한 모빌리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완전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차량을 대폭 확대(200→3,000대)*하고 대규모 주행데이터 축적 추진

* (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) 618 → 8,395억원, 1→3~5개 도시 확대

- 도심항공교통은 '28년 시범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실증 기체 도입, 버티포트(이착륙장) 구축, 안전운용체계 실증 등 종합 지원

* (신규UAM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) 350억원, (신규K-UAM 안전운용체계 실증) 99억원

- 공공분야 국산 드론 보급을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,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비행 실전 역량 강화

* (드론 국산화 / AI 드론 개발) 122→156억원, (신규AI 훈련센터) 3개소, 234억

□ 노후시설·차량 교체부터 주거·일터 화재 예방까지 촘촘한 안전투자

- IoT 및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철도 유지·보수를 스마트화하고 공항 안전 인프라(조류충돌예방, 방위각시설 등)도 촘촘히 확충

* (철도 스마트SOC, AI 유지관리) 798→2,201억원, (공항안전시설) 1,415억원

- **신규**이용객 안전을 위해 차세대 KTX 적기 교체('33~) 추진

* KTX-청룡, 최대속력 320km/h / 총 49량 중 28량 우선 발주('27년 1년차 국비 87억원)

- 일터-보금자리 화재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, **페달오조작 방지** 장치 보급 확대

* (**신규**공장·창고) 314억원, (**신규**공동주택) 50억원, (페달오조작 방지) 8.8→19.5억원

□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지원 강화

- **신규**청소년 유형(만 13~18세) 신설*, 시차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 상시화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(총 537→955만명 지원)

* (기존) 가입 비대상 → (변경) 가입 가능, 청년과 동일한 환급 수준 적용(정률형 30% 등)

- 농어촌, 심야시간 중심으로 **수요응답형** 교통 대폭 확대(0.1→0.2조원)

* (**신규**교통취약지역 무인 DRT) 322억원, (농촌형/도시형 교통모델) 742→1,673억원,

- 중증보행장애인 등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**특별교통수단** 운전원을 충실히 확보한 **지자체에 운영비 지원 강화**(21→38백만원/대)

□ 민간의 SOC 투자 및 우리 기업 해외건설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

-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사업추진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정 대폭 보강(500→4,336억원)

- 우리 기업의 **해외 진출·수주** 전방위 지원을 위해, PIS* 2단계 펀드 조성 완료 및 **신규** 3단계 펀드 조성 개시('27년 2단계 200, 3단계 1,000억원)

* Plant Infrastructure, Smart-city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6년	'27안	비고
■ 도로	62,985	52,888	· 국가지원지방도(2857→3,703), 민자도로건설지원(2,758→1,369)
■ 철도	89,496	83,679	· 강릉-제진(1852→4450) 고속일반철도 시설시스템개량(17952→20341)
■ 항만·수자원	45,326	49,369	· 수자원공사출자(2,500, 신규), 군장항(2단계)(86→1,846)
■ 지역 및 도시	22,663	30,799	· 대통령세종집무실(240→2,057)
■ 물류 등 기타	40,993	59,315	· 자율주행 실증도시(618→8,415), 대중교통비 환급(5,580→8,652)
■ 항공·공항·산단	16,001	12,624	· 신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(350)
합 계	277,464	288,673	전년대비 +4.0%

- ◇ 농어촌 기본소득, 인프라 확충 등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
- ◇ 규모화·AX를 통한 농어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편 및 경쟁력 제고
- ◇ 소비자-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축수산물 유통·수급 정상화
- ◇ 기후·통상위기 등에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

□ 기본소득 본격 확산,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구현

-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사업 대상(69개)의 절반까지 확대(17→35개)
- 공익직불금(농업) 3조원 진입*, 수산직불 확대** 등 농어가 소득 확충
 - * '밭' 면적직불금을 '논' 수준으로 상향(+25%), 전락작물 확대(하계조사료 +30만원/ha)
 - ** 면섬 거주 어가 대상 조건불리직불 인상(+50만원), 내수면 배합사료직불 도입
- 기후변화·동물복지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택직불제* 확대
 - * 친환경농업 밭과수 단가 인상(+50만원/ha), 신규동물복지축산직불 도입(산란계·돼지)
- 신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민간 출연 부족분(약 0.7조원)을 임기 내 재정지원하여 주민이 원하는 농어촌 활력사업 추진('27년 0.2조원)
- 비보험작물(땅콩 등) 신규준보험(77억원)으로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

□ 규모화를 통한 구조개편, AX 확산, 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

- 소농 위주 영농 탈피를 위한 “공동영농 패키지 지원*” 도입, 자율주행 트랙터, 운반 로봇 등 신규피지컬 AI 실증·보급(208억원)
 - * ①농지집적화 + ②시설·장비·로봇 보급 + ③저금리 정책자금 + ④전문인력 양성
- 어선 집중감척 및 선박현대화(0.4조원)를 추진하고, 활어·김 등 수산업에 AX를 본격 확산(+435억원)하여 어업 생산성 제고
- 수출바우처(870→970개) 확대로 기업의 물류·통관 부담을 완화하고, 유망 수출품목과 연계한 글로벌 NEXT K-푸드 육성(+140억원)
 - 신규K-식자재 정책자금(0.1조원)을 통한 해외의 한식 접근성 제고

□ 국민 먹거리물가 안정을 위한 **농축수산물 유통·수급구조 정상화**

- **신규**민관합동 SPC를 통해 공공이 직접 참여한 **공공형 물류센터·유통법인** 설립(110억원, 총 0.2조원)으로 유통구조 혁신 도모
 -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**바우처 확대**(2,000→3,300개, 수산추가) 및 **저금리 정책자금**(정산) 추가 공급(0.1→0.2조원)
- 드론·위성을 활용한 **농업관측 고도화**(+16억원) 및 주요품목 대상 빈틈없는 **선제적 수급관리***(+548억)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
 - * 생육조절, 면적조정 및 출하정지 등을 통해 급격한 가격변동 사전에 예방
- **산란계축사** 개선을 위한 **신규**저금리 정책자금 신설(0.3조원)하고, **신규**가격안정제 도입(2개품목, 90억원) 등 안정적인 생산 지원
- **신규**알뜰소비앱 구축(11억원)으로 실시간 물가 정보를 제공하고, **천원의 아침밥***, **농식품바우처**** 등 취약계층 식비 지원 확대
 - * 국비지원금액을 상향(2→3천원)하고 지원물량도 확대(540→570만식)
 - ** 지원품목에 국산 수산물을 추가하고, 지원단가 인상(1인가구 4→5만원/월)

□ **필수농자재 수급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**

- 비료 적정량 사용을 위한 **신규**실증지구 조성(10억원) 및 가축분뇨·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**신규**비료절감 신기술 개발·보급(39억원)
 - 비료 **원료구매자금** 융자(0.2→0.5조원)확대로 비료가격 상승 억제
- 산소공급기 등 **이상수온 대응**을 위한 **장비를 보급**(+40억원)하고,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·방어 등 **양식품종 전환 지원**(16→25개소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 고
■ 농업·농촌	203,191	225,021	· 농어촌기본소득(2,341→11,658), 맞춤형농지(18,077→22,617)
■ 수산·어촌	34,794	39,302	· 신규 연근해어업 발전지원(1,000), 연근해어선감척(2,037→3,488)
■ 임업·산촌	32,132	32,753	· 산림사업종합자금(129→1,929), 산림재해복구비(2,500→1,700)
■ 식품업	10,198	9,779	· 글로벌육성지원자금(5,100→4,000)
합 계	280,315	306,854	전년대비 +9.5%

- ◇ 자주국방 역량 강화로 우리군 주도의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구축
 ◇ 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한 군구조 개편 및 스마트 강군 육성 적극 추진

- **최첨단 핵심전력 도입으로 우리군 주도의 연합방위 역량 강화**
- 핵추진잠수함·KF-21 등 자주 국방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도입
 - * 핵추진잠수함(신규 0.1조원, '30년대 중반 진수), KF-21 양산(1.4→3.3조원)
 -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 장비 및 무기체계 확보
 - * 특전사 침투물자 24종(고공침투 13종, 수중침투 11종) 확보(98→1,348억원), 대화력전 대응용 천무(다연장로켓) 230mm급 무유도탄 필수물량 확보(1,803→5,504억원)
- **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응하여 부사관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, AI·드론 등 첨단전력 확보, 예비전력 정예화, 비전투임무의 민간위탁 추진**
-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 확대를 위해 초급 간부 총보수를 월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, 적금 신설과 함께 단기복무 장려금도 대폭 인상
 - *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 단가 인상(1,000→1,200만원, 532→1,152억원)
 -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적금(최대 월30만원, 36개월) 신설(신규 189억원)
 - AI·드론·로봇 등 최첨단 유·무인 복합체계로 전환, 상비예비전력 정예화* 및 비전투임무 민간위탁 시범 실시** 등 적극 지원
 - * 상비예비군 확대(3,700→7,000명) / 과학화 동원훈련장 착수(신규 4억원 '27~'31년 총 836억원)
 - ** GOP대대¹개 제초 등 종합관리(신규 9억원), 민통초소⁶개 및 주둔지²개 경비(신규 25억원) 시범사업
- **K-방산 4대 수출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 및 국방 R&D 투자 확대**
- 혁신 기업 발굴부터 글로벌 공급망 진입까지 성장 사다리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방산 강소기업 육성·자립 기반 강화
 - AI·드론·로봇·반도체·우주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전략 분야 기술개발 집중투자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 고
■ 전력운영	472,318	500,416	· 병내일준비지원(+0.2조원),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(+0.1조원) · 군수지원 및 협력(+1.0조원), 국방AI(+0.2조원), 인건비(+0.5조원) 등
■ 방위력 개선	199,544	227,112	· KF-21 적기 전력화(+1.9조원), 핵추진잠수함 개발 착수(+0.1조원) · K-방산 육성 지원(+0.1조원), 국방반도체(R&D)(+565억원)
■ 병무행정	5,178	5,249	· 인건비(+93억원), 사회복지요원 사회복지기준비금(+31억원) 등
합 계	677,040	732,777	전년대비 +8.2%

- ◇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·문화 영토 확장
- ◇ 재외 거점공관을 통한 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국민보호기능 강화
- ◇ 국민의 대북·통일 인식 및 정책참여 역량 제고

- 우리 국익과 연계한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K-이니셔티브 확산 및 외교·경제·문화 영토 확장
 - AI, 문화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의 전략형 프로젝트 확대(198건, 0.9조원)를 통해 K-이니셔티브 확산 및 기업 해외 진출 지원
 - 정상외교 후속조치*(0.3조원)를 차질없이 지원하고, 핵심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**(0.1조원)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·지원
 - * NATO 신탁기금 등(+1,260억원), 신규 인도 조선해양 인력양성(29억원, 총사업비 414억원)
 - ** 카자흐스탄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조성(44억원),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(50억원)
- 재외 거점공관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·신속대응 체계 강화
 - 분야별 거점공관의 전문 역량과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K-문화·AI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우리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
 - 재외국민보호 인프라 지원을 통해 해외 위난 및 사건·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차질 없는 대응체계 구축
- 통일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대북·통일 인식 제고 노력 강화
 - 평화통일 교육위원 및 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형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대북·통일 인식 제고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 고
■ 외교·통상 부문	57,576	58,246	· ODA(타분야 포함, 53,548→52,438) ·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(37→40) · 해외 위난·사건사고 대응(140→178)
■ 통일 부문	12,819	12,956	· 남북협력기금(10,023→10,115)
합 계	70,395	71,202	전년대비 +1.1%

- ◇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뒷받침
- ◇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 고도화

□ 민생범죄 대응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, 중수청·공소청 개청 등 사법개혁도 차질없이 뒷받침

○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, AI로봇·수사차량 등 치안현장 설비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심 치안서비스 제공

○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(0.1조 → 0.9조), 범죄피해자 보호* 및 재범방지 지원체계** 강화

* (범죄피해자 국선번호) 121→133억원, (범죄피해자구조금) 118→142억원 등

** 신규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(16개, 260억원)

○ 중수청·공소청 개청 및 법원 사법서비스 인프라 확충* 지원

* 신규 대법원 리모델링(100억원), 신규 법원 신설(회생법원 2개, 해사국제상사법원 2개 등 6개소)

□ 기후위기 대응,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AI·로봇·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효율화

○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지구 확대(42→54개), 대심도 하수저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의 호우피해 예방(1.1→1.3조)

○ 기업의 자발적인 공장화재 예방시설 구축을 위해 신규 화재취약시설 용자(500억원) 및 신규 자동화산소화기 보급지원(年 4,000개소)

○ 신규 소방로봇 도입(49대), 산림헬기 증강(대형1, 중형1), 신규 해안순찰 드론 도입(22대) 등 산불·도심화재·연안안전 대응 체계 첨단화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 고
■ 법무·중대수사	49,349	61,268	· 국가배상금(1,448→8,400), 중수청(4,724), 공소청(10,854)
■ 경찰	147,037	154,058	· 현장AI로봇(24→561), 경찰기동력강화(875→1,012)
■ 법원 및 헌재	26,701	28,186	· 신규 대법원 리모델링(100), 신규 법원 신설(6개, 251)
■ 재난관리	28,855	21,813	· 재해위험지역정비(10,630→11,530), 우수유출저감(400→430) * 재난복구비(10,100→2,000억원, 전년분 △8,100억원)
■ 해경	21,047	22,257	· 신규 불법외국어선 단속 함정(631), 연안안전관리장비(18→61)
합 계	272,989	287,583	전년대비 +5.3%

- ◇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뒷받침
 ◇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및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 확대

-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사회연대경제 모델 확산을 통한 포용적 사회통합 및 성장 기반 강화
- **신규**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(2.85조원) 및 **신규**지방미래성장지원금(3.5조원)을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(1.15→1.45조원)
 - 사회연대조직의 창업·스케일업 지원, 인재 양성, 투·융자 지원, 인프라 구축 등 사회연대경제 자생적 생태계 조성(0.1→0.3조원)
- 공공 부문 AX 본격화를 위해 전 부처 행정 AI 도입 등에 중점 투자*하고,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
- * AI 시스템 신규투자: ('26년) 943 → ('27년) 4,290억원(+354.9%)
- 시범 운영 중인 업무용 AI 시스템(SaaS)을 전부처(44개 기관)로 확산
-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및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등 정책금융 확대
-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형성 지원 대상 확대(1.7조원)
 - 중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저금리(4.5%), 장기(10년만기), 소액(100만원 한도) 대출 신설(3,000억원)

(단위: 억원)

	'26년	'27안	비고
■ 정부자원관리	16,408	19,150	· 신규 사회연대경제추진체계구축(49), 공공데이터개방(407→723)
■ 재정·금융	413,703	515,496	· 국고채 이자상환(292→350조원), 신규 우리아이자립펀드(1465) · 청년미래적금(0.7→1.7조원), 신규 K-민생지킴대출(3,000),
■ 지방행정·재정지원	725,339	891,142	· 신규 통합지방정부지원(+29조원), 신규 지방미래성장지원금(+35조원)
■ 일반행정	36,684	42,217	· 경제구조통계작성(33→236),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(278→407)
■ 입법 및 선거관리	12,993	13,136	· 재외선거관리(0.5→75), 국회의원선거관리(0.5→53)
■ 국정운영	8,530	9,157	· 경제인문사회연구회(R&D)(309→655)
합 계	1,213,657	1,490,298	전년대비 +22.8%
(교부세 제외)	520,108	718,400	전년대비 +38.1%